

정책연구
2018-20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창업지원사업

김세움 · 김주섭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세움) 1
제2장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김세움) 3
제1절 청년 고용 관련 창업지원정책의 최근 흐름	3
1. 이명박 정부	3
2. 박근혜 정부	4
3. 문재인 정부	4
제2절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 개요	5
1.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6
2. 문체부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7
3.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	8
4. 중기부 창업기업자금(융자)(청년전용)	9
5. 중기부 창업선도대학	10
6. 중기부 창업인프라 지원	10
7. 중기부 창업저변 확대	11
8.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12
제3절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 추진 현황	12
1.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12
2. 문체부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13
3.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	15
4. 중기부 창업기업자금(융자)(청년전용)	17

5. 중기부 창업선도대학	18
6. 중기부 창업인프라 지원	19
7. 중기부 창업저변 확대	19
8.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21
제4절 소 결	21
제3장 창업지원정책 효과 정량평가	(김세움) 25
제1절 선행연구	25
제2절 평가방법	30
제3절 평가결과	33
1. 기초통계	33
2. 핵심 분석결과	40
제4절 소 결	59
제4장 청년층 창업환경 및 정책 지원실태 분석 (김세움·김주섭)	63
제1절 청년 창업자 FGI 결과 분석	63
1. FGI 개요	63
2. FGI 결과	67
제2절 GOMS 자료를 활용한 청년층 창업실태 분석	71
1. 청년층 창업비용 규모와 조달 방식	72
2. 청년층 창업 애로요인	73
3. 창업 도움요인	77
제3절 소 결	82
제5장 창업지원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김주섭) 84
제1절 미국의 사례	84
1. 창업지원정책 개요	84

2. 창업 플랫폼	85
3.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86
4. 창업지원 파트너십	89
제2절 이스라엘의 사례	90
1. 창업지원정책 개요	90
2. 창업정책의 주요 내용	91
3.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93
4. 요즈마 펀드	95
5. 해외 네트워크	97
제3절 중국의 사례	98
1. 창업지원정책 개요	98
2.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100
3. 중국 창업지원정책의 특징	103
제4절 소 결	104
제6장 결 론	(김세움) 106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06
제2절 정책 시사점	111
1. 지식기반 창업지원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111
2. 지식기반 창업지원에 있어 청년층 외 타 연령대에 대한 기회 확대	112
3. 창업 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정부 지원 제한	113
4. 정책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정책 집행	114
5. 재학생 대상 창업지원사업의 목표 재검토	115
6. 창업인턴제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	117
7. 액셀러레이터 시장 활성화	117
제3절 맺음말	118
참고문헌	120

표 목 차

<표 2- 1>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2018년 기준)	6
<표 2- 2>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연도별 예산	13
<표 2- 3> 평가지표별 문체부 자체 평가결과	13
<표 2- 4>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연도별 추진 경과 및 실적	15
<표 2- 5>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16
<표 2- 6> 창업기업자금(융자)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17
<표 2- 7>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18
<표 2- 8>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19
<표 2- 9> 창업저변 확대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20
<표 2-10> 창업저변 확대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21
<표 3- 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기초통계(표본 수 2,049)	34
<표 3- 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벤처 확인 유형	36
<표 3- 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성장 단계	36
<표 3- 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창업 시 창업주 연령	37
<표 3- 5>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창업 방식	37
<표 3- 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조사연도 정부정책 지원 경험	38
<표 3- 7>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주력제품 (서비스)과 관련이 가장 큰 기술	38

<표 3- 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주력제품 (서비스) 개발단계	39
<표 3- 9>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세계 최고수준 기업 대비 기술력 수준	39
<표 3-1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국내 최고수준 기업 대비 기술력 수준	39
<표 3-1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정부/ 국가연구기관 협력활동 경험	40
<표 3-12>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종사자 수(10년차 이하 벤처기업)	42
<표 3-13>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종사자 수(10년차 이하 벤처기업): 통제변수 추가	44
<표 3-14>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정규직 근로자 수(10년차 이하 벤처기업)	46
<표 3-15>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정규직 근로자 수(10년차 이하 벤처기업): 통제변수 추가	47
<표 3-16>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매출액(10년차 이하 벤처기업) ..	49
<표 3-17>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영업이익(10년차 이하 벤처기업)	50
<표 3-18>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종사자 수(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52
<표 3-19>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종사자 수(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통제변수 추가	53
<표 3-20>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정규직 근로자 수(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54
<표 3-21>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정규직 근로자 수(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통제변수 추가	55
<표 3-22>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매출액(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57
<표 3-23>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영업이익(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58
<표 4- 1> 창업비용 규모와 비용조달 방식	72
<표 4- 2> 창업 애로요인: 비용조달	73
<표 4- 3> 창업 애로요인: 기술 확보	74
<표 4- 4> 창업 애로요인: 인력 확보	74
<표 4- 5> 창업 애로요인: 행정절차	75
<표 4- 6> 창업 애로요인: 업종 선정	76
<표 4- 7> 창업 애로요인: 사업장 위치 선정	76
<표 4- 8> 창업 애로요인: 창업관련 정보의 수집	77
<표 4- 9> 창업 도움요인: 전공지식	78
<표 4-10> 창업 도움요인: 직장경험	79
<표 4-11> 창업 도움요인: 동아리·동호회 활동경험	79
<표 4-12> 창업 도움 요인: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80
<표 4-13> 창업 도움 요인: 민간창업 컨설팅	81
<표 4-14> 창업 도움 요인: 창업보육과정	81
<표 5- 1> 미국의 주요 대학별 창업교육과정의 특성	87
<표 5- 2> 미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주요 창업·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88
<표 5- 3> 중국의 시대별 창업 열풍	100
<표 5- 4> 국가 과기기업 인큐베이터 13·5 발전 주요 계획	102

요 약

본 연구는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대표적 사업인 창업지원정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청년층 창업 선택 결정요인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때 성과 평가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촉진 및 창업 기업의 성장 및 생존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창업지원정책 성과 제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의 개요 및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 정부의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은 혁신 창업자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생활형 아이디어 및 소셜벤처 창업을 촉진하며,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전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창업지원사업군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19개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의 기준으로 청년 대상 사업으로 식별된 사업은 총 9개인데, 상대적으로 결이 다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을 제외하면 교육부의 대학창업펀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6개 사업(창업사업화 지원, 창업기업자금(융자)(청년전용), 창업선도대학, 창업인프라 지원, 창업저변 확대, 창업성공패키지) 등 총 8개의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청년 대상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자체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는 정량지표와는 달리 사업 참여자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관련 정성지표에 있어서는 대체로 목표

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량 및 정성 평가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는 원인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달성이 어렵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여 실적과 비교하는 방식의 정량지표보다는 실제 사업 수혜자들의 주관적 평가가 해당 사업의 여러 측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개별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유형을 활용하여, 정부사업 참여 관련 유형 및 기타 유형 간 고용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정량평가를 수행하였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의 조사대상인 벤처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을 의미하는 만큼, 현재 정부가 청년층 창업지원에 있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에서 정부지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자료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로부터 각 기업의 정책지원 수혜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 참조하는 변수는 조사대상 기업의 벤처확인 유형이다. 벤처확인의 네 가지 유형은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으로 나뉜다. 이때 기술평가대출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정책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은 정부의 정책지원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제3장의 정량분석에서는 기업 연령이 10년 이내인 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2006년 6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창업 초기에 관련 제도 수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던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정부 정책지원이 청년층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미치는 일자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주의 창업 당시 연령대 관련 문항에 대한 답변 내역을 활용하였다. 이때 창업주 연령대가 30대 이하인 경우를 청년층 창업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창업 10년차 이하인 모든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확인유형과 고용성과(총 종사자 수 및 총 정규직 근로자 수)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창업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벤처확인유형인 기술평가대출 혹은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벤처기업의 최근 고용성과가 타 유형의 벤처기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벤처기업 선정 관련 정책 지원이 수혜기업의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창업 초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의도하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 중 최소 하나는 구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청년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수혜대상으로 간주하는 30대 이하 연령층일 때 창업주가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주가 60대 이상일 때 창업한 경우 대비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일자리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지원정책을 펴나갈 때, 지식기반형 혹은 기술형 창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30대 이하 청년층의 창업 유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창업 당시 창업주가 몇 년간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상태였는지에 대한 변수의 추정계수는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단 창업주의 창업 당시 연령대, 즉 창업 이전까지 쌓아 온 사회경험의 대리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해당 분야의 직접적인 경험은 향후 기업의 고용성과와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창업 10년차 이하 모든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확인유형이 재무성과(매출액 및 영업이익)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벤처확인유형이 최근 고용성과와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무성과와도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성과를 고용 측면에서 모든 재무지표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계없이, 정부의 벤처기업 대상 창업지원정책이 수혜기업의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했거나, 혹은 향후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데 실패했거나 최소한 둘 중 하나에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창업 후 연차 관련 변수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고용 변화 추이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재무성과 지표가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더불어 창업 당시 창업주의 연령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와는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일 때 창업한 기업의 고용성과가 유의하게 더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창업 이전 창업주의 전반적인 사회경험 차이로 인해, 유사한 재무성과하에서도 고용 관련 결정이 차별화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창업 전 현재 업종에서의 실무경험은 영업이익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고 매출액에 대해서만 일부 모형에서 약하게 유의한 음(-)의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을 창업 10년차 이하 중 창업 시점에 창업주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였던 기업들로 국한하여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중에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은 유형의 기업의 고용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창업 후 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의 벤처확인유형과 재무성과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특별히 강하게 유의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청년층이 직면한 창업 환경 및 정책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에서 제시된, 청년 창업자 대상 두 차례의 FGI로부터 도출된 핵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초기 정부의 창업지원은 기업가들의 창업 아이디어 실

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자본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의 창업지원은 많은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기관이 지향하는 목적과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조화시키는 데 갈등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정부의 창업지원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일정 기간 이후까지 정부 지원을 지속할 경우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할 때, 기존의 해외 전시회 개최 등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외 유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령이나 경력 등의 관점에서 언제가 창업의 최적 시점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무조건 대학 졸업 직후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게 모든 이들에게 최적일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본인 스스로 최적 창업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창업하면서 초기 자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창업지원 관련 브로커의 불법적인 활동이 만연한 데 따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불법적 활동에 치중하는 창업 브로커들은 도태시키되,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재 창업지원 브로커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중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건전한 시장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행 정부의 창업인턴제 사업에 대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활용도 제고 및 긍정적 영향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청년 창업의 실태는 전반적으로 FGI 분석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GOMS 조사에서도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가 미미하고, 민간 창업 컨설팅 역시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FGI 결과 이외에도 GOMS의 분석결과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청년 창업이 기술창업보다는 일반창업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애로요인의 분석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청년 창업의 현재 모습이 그리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창업에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현재 청년 창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요소는 직장 경험이 유일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동호회 활동, 민간 창업 컨설팅, 창업보육 과정 등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년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전반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만을 가지고 정부의 청년창업정책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국내외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폭넓게 검토한 후 건강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 3개 국가의 창업지원 정책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창업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각국의 정책 환경과 제도적 기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3개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정책의 관료화와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의 협력관계와 파트너십을 중시했던 미국의 사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역할이 비대하였으나, 비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비효율적인 정책결과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후에는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오히려 민간 중심으로 정책 추진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의 중요성이다. 3개국에서 공히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이 창업정책의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은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창업자뿐 아니라, 가급적 조기에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조기교육의 확산으로 더욱 더 많은 청소년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교육이 기술과 결합하게 될 경우 광범위한 혁신기술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창업 아이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운용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가자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확하게 기술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자의 관리체계가 창업지원정책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YC의 활동에서 살펴보았듯이, 액셀러레이터는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단지 단기적인 수익에 그치지 않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존재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요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 창업지원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의 창업지원이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식기반 혹은 기술 창업에 있어, 정책 수혜기업의 고용 및 재무성과 향상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주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식기반 창업지원에 있어 청년층 외 타 연령대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부의 창업지원을 창업주의 특정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본인 스스로 최적 창업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창업하면서 초기 자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창업 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초기 자본시장 제약 및 정보 미비 해소에 있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받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시장경제의 근간을 확실히 유지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을 테니 대신 불필요한 규제도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의 함양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정부가 각종 사업을 통해 지원할 때, 정책 공급자의 관점보다는 최대한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창업지원에서 민간의 역할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를 좀 더 가속화하여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창업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학생 대상 창업지원사업의 목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대학 재학생 대상 정부 창업지원사업, 예를 들어 교육부의 대학창업펀드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졸업 후 바로 성공적인 지식기반 창업

이라는 결실을 맺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 구현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여섯째, 창업인턴제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현행 정부의 창업인턴제 사업의 긍정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창업 의욕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창업인턴 수료자에 대한 대학 학점 부여 등을 통해 가급적 창업인턴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독려할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곱째, 액셀러레이터 시장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민간 차원의 창업 플랫폼으로서 IT 분야 대기업이 운영을 주도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업 브로커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시장 수요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할 때, 그 긍정적 영향이 가급적 빨리 실현되어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외 경제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은 시점에서, 혁신성장의 일환으로서 청년층의 조기 창업을 최대한 독려하여 단기 고용상황 개선에 일조하도록 하는 유인이 정부 입장에서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각종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청년층으로 하여금 졸업 직후 바로 창업에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본 연구 결과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정부의 창업지원이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식기반 혹은 기술 창업에 있어, 정책 수혜기업의 고용 및 재무성과 향상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주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드러

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정부의 창업지원 시 창업주의 특정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창업자 본인의 관점에서조차 대학 졸업 직후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최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본인 스스로 최적 창업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초기 자본 제약 및 정보 미비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대학 입시 준비에 편중된 우리 교육 현실의 제약하에서 최대한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창업인턴제의 긍정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창업 의욕을 제고하며, 민간 주도 창업 플랫폼인 액셀러레이터 시장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창업주들이 지식기반형 창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질 좋은 일자리 중 상당수는 자연스럽게 청년층에게 돌아가게 되어,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를 완화하는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혁신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창업지원이 단기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없다. 장기 경제체질 강화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현재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창업지원에 대한 본 평가 연구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희망한다.

제1장 서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반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1차 연도(2017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평가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였고,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연구로 먼저 청년층 직접일자리창출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이성희·노용진, 2017). 이제 2차 연도인 2018년에는 1차 연도의 직접일자리창출프로그램 심층평가에 이어 ‘청년층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집에 수록된 창업지원 관련 대책을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있어 기술형 청년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현 정부에서 창업지원정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이 기대되는바, 지금까지 이뤄져 온 창업지원정책이 청년 일자리 확충에 얼마나 기여해왔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로부터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대표적 사업인 창업지원정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청년층 창업 선택 결정요인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때 창업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청년층 창업 선택 결정

요인 및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촉진 및 창업한 기업의 성장 및 생존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창업지원정책 성과 제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예산 및 사업 참여 실적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때 2018년 시행 중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총 19개의 창업지원사업 중에서, 주된 수혜대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 관련 예산과 사업 참여 실적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때 특정 세부 사업보다는 청년층 창업지원정책 전반의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 적절한 분석방법을 통해 정량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개별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유형을 활용하여, 정부사업 참여 관련 유형 및 기타 유형 간 고용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청년층 창업자에 대한 FGI 조사를 실시하여 입수된 정성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다양한 창업 애로요인과 창업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결과를 도출한 후 이러한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청년층 창업 실태에 대한 기초 분석으로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에 포함된 창업 관련 설문 응답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의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 창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의 창업지원 제도·정책의 현황, 변화 양상 및 성과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청년층 창업지원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핵심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제 2 장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제1절 청년 고용 관련 창업지원정책의 최근 흐름

본 절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창업지원에 대해 어떠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명박 정부

1. 청년 고용 촉진 대책(2008. 8)	-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및 사회적 기업가 육성
2. 청년 내일 만들기 1차(2010. 10)	- 청년의 창조적 도전 적극 지원 •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 창업·창조고용 기반 조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3. 청년 내일 만들기 2차(2011. 5)	- 전국적인 청년 창업 분위기 조성 • 청년의 글로벌 창업 열기 확산 •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 촉진 - 스마트 창조기업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을 확대 • 스마트 창조기업 양성 교육과정 확대 및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모집공고 및 기업홍보 등에 있어 공동채용 사업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발표한 청년고용 촉진 대책에서 청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0년과 2011년에 잇달아 발표된 청년 내일 만들기 대책에서도 유지되었다.

2. 박근혜 정부

1. 청년 고용 촉진 대책(2014. 4)	- 청년창업 저조 ⇨ 청년의 창업의지 고취 및 지원강화 • 벤처·창업 체험프로그램 • 창업보육센터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 청년 소셜벤처
-------------------------	--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야심차게 추진된 청년 창업 장려 정책이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한 보완책으로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실시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 청년 창업의 허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3.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별로 담당 영역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3월에 발표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혁신 창업자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생활형 아이디어 및 소셜벤처 창업을 촉진하며,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 2017년 주요 일자리 과제 세부추진계획 (201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등 유망환경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경력단절여성을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고 취·창업 관련 지원을 강화 • 연구개발특구에서 공공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 기술지식 기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201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창업자 발굴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개최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 유망 창업 후속지원 강화(tips 확대) • 정책펀드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 • 개방형 혁신 촉진 • 글로벌 창업 활성화 - 생활형 아이디어 및 소셜벤처 창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혁신형 창업 사업화 지원 • 복합 청년몰 신규조성 • 청년 창업농어업인 육성 • 청년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 촉진 - 창업부담의 완화와 창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 세금을 감면하고 애로사항 해소 • 청년 친화적 창업공간 확충 • 지역 혁신창업 마을 조성 •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및 인프라 강화 • 제도전 안전망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제2절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 개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전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창업지원사업군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19개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의 2018년 7월 보도자료에서 청년 대상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표 2-1>에 제시된 총 9개 사업이다.

〈표 2-1〉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2018년 기준)

부 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문체부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
중기부	창업기업자금(융자)(청년전용)
중기부	창업선도대학
중기부	창업인프라 지원
중기부	창업저변 확대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pp.59~60;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효율화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 p.5.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의 경우, 주된 정책 수혜대상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서 타 부처의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들 8개 사업의 주요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대학창업펀드¹⁾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사업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 계정을 별도로 설치한 후, 동문,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등이 공동 참여하여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매칭 출자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펀드당 40억 원 기준으로 자펀드 5개 내외로 규모가 설정되어 있다. 매칭 출자 지원조건은 ‘정부 3: 대학 등 1’이며, 한국벤처투자가 주관기관이 되고,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기관이 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1) 교육부(2018), 『2018년도 예산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해당 사업의 법령적 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의 2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2. 문체부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²⁾

문체부가 주관하는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사업은 관광벤처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상상력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관광벤처기업의 투자수익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관광 분야 금융투자시장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도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관광벤처와 관광벤처로 나뉜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은 예비관광벤처로 분류되고, 창업 3년 이상 관광 관련 중소기업은 관광벤처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 지방 거주, 만 34세 미만 청년창업자의 경우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예산 22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을 연중 실시하며, 1월부터 3월 사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화자

2) 고용노동부(2017),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과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관광부문 재정집행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금·교육·컨설팅·홍보 마케팅·판로 개척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3.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³⁾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발굴 및 육성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의 참여 및 선진 사업모형 기법을 통해 지원하고 기업의 도약과 생존율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금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중견·벤처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급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창업팀을 육성한다.

해당 사업의 내용은 다음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 사업의 추진 등)』에 그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다.

- ① 중소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 ③ 중소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해당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2,700명(팀)이다. 사업시행은 출연 및 보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주체는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창업투자회사,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다양하다. 물론 사업 수혜자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된다.

4. 중기부 창업기업자금(융자)(청년전용)4)

중기부의 창업기업자금(융자)(청년전용) 사업의 목적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다.

해당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4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이다. 해당 사업은 1998년 4월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 정부의 다음 공약 및 국정과제와 관련을 갖고 있다.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청년 일자리):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공약집, p.71)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중소 중견기업 육성):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Start-Up의 생존율을 높임(공약집, p.116)
-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중기부) - ② 혁신창업활성화: 창업-성장-재도전의 성장 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해당 사업은 1998년 이후 계속 사업이고, 2018년도 사업규모는 전체 창업기업자금(융자) 1조 8,660억 원 중 청년전용으로 1,300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사업시행주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4) 중소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5. 중기부 창업선도대학⁵⁾

중기부 창업선도 대학육성사업은 전담 인력, 시험장비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창업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준비부터 창업 후 성장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권역별로 나누어 총 40개 대학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데, 이 중 8개 대학은 2017년에 신규 지정되었다.

해당 사업의 지원은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지원단 운영, 대학 자율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실전창업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창업아이템사업화는 아이템 개발비, 기술정보활동비(전문가활용비 등), 마케팅비 등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참여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표이다. 더불어 창업지원단, 즉 총장 직속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등) 및 책임멘토 멘토링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한편 대학자율·특화 프로그램으로 창업경진대회, 청년창업한마당 투어 등 지역 창업붐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전창업강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에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2년 이후 계속 사업이고, 사업 규모는 예비창업자 등 창업 초기기업 1,100명 내외이다. 사업시행주체는 창업진흥원 및 40개 창업선도대학이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이 사업 수혜자로 설정되어 있다.

6. 중기부 창업인프라 지원⁶⁾

중기부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의 목적은 창업보육센터의 건립(리모델링)

-
- 5)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6)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지방에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창업 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입지지원 사업) 등에 그 법령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1998년 이후 계속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262개 창업보육센터 및 13개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시행방법은 보조이며 사업시행주체는 (사)한국창업보육협회(창업보육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수혜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다.

7. 중기부 창업저변 확대⁷⁾

중기부 창업저변 확대사업의 목적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교육과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 마인드를 확립하고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시제품 제작 등 실질 지원책을 연계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제2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창업교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창업대학원의 지정)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창업정보의 제공) 등 법령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고 있다. 보조 및 출연이 이루어지는 사업시행주체는 창업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업대학원 운영대학,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7)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8.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⁸⁾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제조업 중심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창업의 모든 단계를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과 창출형 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때 창업 준비 단계에서 교육 및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창업 실행 단계에서 사업화를 독려하며, 창업 후 성장 단계에서 BI, R&D,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투자지원 등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 그 법령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이후 계속 사업으로서 그 규모는 2018년 기준 540억 원에 달한다. 사업시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3절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 추진 현황

본 절에서는 8개의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의 예산 및 참여기업 수 등 추진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1. 교육부 대학창업펀드⁹⁾

2017년에 시작된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사업의 연도별 예산 및 투자 대상기업 수는 다음과 같다.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대학창업펀드 조성	120억 원 사업 신설 및 투자대상기업 258개	150억 원 투자 대상기업 확대

8)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9) 교육부(2018), 『2018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 문체부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문체부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의 연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2〉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8,750	22,077	2,990	1,000	18,08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관광부문 재정집행계획』.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평가지표별 자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 평가지표별 문체부 자체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1-1. 집행이행도	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에 의하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진흥법 제정안」 발의가 2018년으로 지연되고 있음 * 「관광숙박진흥법 제정안」: 2018년도 국회 발의 추진 예정
정책효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관광벤처 창업률은 성과지표의 목표치(90%)보다 3.9% 상향 달성한 것을 감안할 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 90%, 실적 93.9%로 달성률은 104.3% ○호텔업 등급평가 실시 결과 목표치가 300건인데 305건에 대해 평가 실시하여 목표치를 1.7% 초과 달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 100%, 실적 101.7%로 나타남 ○기타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관광두레조성, 안전 캠페문화 확산 등에 있어서도 업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판단

〈표 2-3〉의 계속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효과	2-2. 정책 효과성	㉠ 매우우수 ㉡ 매우우수 ㉢ 매우우수	○관광벤처기업 생존율이 일반창업기업 대비 높으며, 호텔업 등급 평가 참여도도 목표치 초과 * 4년차 생존율(2016년 통계청 기업생멸 통계): - 관광벤처기업 61.8%, 일반창업기업 31.9% * 2017년 호텔업 등급 평가 참여 목표 - 목표 300개, 실제 참여 305개 ○캠핑장 안전을 위한 야영장 등록제의 정착 및 유원시설 관련 안전 대책 추진 중 * 야영장 등록: 2015년 5월 16%에서 2017년 8월 90%로 상승 *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안전대책 마련(10.19) ○관광두레 정책을 통해 주민사업체 및 청년두레를 청년층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정책적 파급효과 제고 - 주민사업체 수: 2016년 154개에서 2017년 198개로 증가 - 청년두레: 2016년 11개(7.1%)에서 2017년 17개(8.6%)로 증가 ○관광벤처 창업기업 및 관광두레 확산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안전한 캠핑문화 확산 및 유원시설 안전 관리에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판단됨 ○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관광두레 조성사업은 국정과제사업으로 지정 * 국정과제 73-4(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정책환류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	매우우수	○2016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 없음 ○호텔등급 평가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평가를 4회 개최하고 호텔등급 제도 취지 관련 지방 설명회를 4회 개최하여 정책취지를 공유하고 호텔등급 참여를 유도 * 2016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 없음 ○관광벤처를 육성하고 관광두레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업계 및 지자체 등과 수시로 업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표 2-3〉의 계속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환류	3-2. 환류이행-현장의견수렴 및 반영	매우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등급 평가자문위원회(업계, 전문가, 소비자 10명 참여)를 4회 개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장애인 이용시설 보강 및 호텔 등급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데 반영 ○호텔등급 결정 지방설명회를 4회 개최하여 200여 명이 참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참여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관광벤처기업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2017년 7월 장관 및 관광벤처 관계자 13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대상 확대: (기존) 관광벤처기업 → (개선) 관광벤처기업+예비관광벤처기업 - 클라우드펀딩사업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3.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4〉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연도별 추진 경과 및 실적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사관학교(284개팀, 260억 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84건, 75억 원) -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883건, 499억 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84개팀, 53억 원) -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4개 운영기관, 27개팀, 50억 원)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736개사, 423.4억 원) -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84개팀, 53억 원) - 청년창업사관학교(252개팀, 260억 원)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84개팀, 75억 원) -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45개팀, 50억 원) - 창업인턴제(87명, 50억 원), 제도전성공패키지(59개사, 35억 원)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880개사, 445.8억 원)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160개사, 100억 원)

〈표 2-4〉의 계속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1,379개사, 200억 원) -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140개팀, 120억 원) - 청년창업사관학교(300개팀, 260억 원)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88개팀, 70억 원) - 창업인턴제(143명, 100억 원) -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218개팀, 60억 원)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1,555개사, 600억 원)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창업벤처기업 449개사, 100억 원) -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247개팀, 250억 원)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선도벤처연계 83개사, 창업인턴제 55명, 120억 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95개사, 53억 원) - 스마트벤처캠퍼스(147개팀, 122억 원) - 1인 창조기업 활성화(513개사, 122억 원) - 판교밸리 창업존 구축(109개사 입주공간 배정) - 시니어 창업지원(신규센터 3개소, 47.4억 원, 세대융합캠퍼스 6개소, 127억 원)

자료: 중소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더불어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표 2-5〉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창업률(%)	목표	신규	94.9			
	실적	-	95.4			
	달성도	-	100.5			
창업성공률(%)	목표		신규	66.2		
	실적		-	74.9		
	달성도		-	113.1		
평균일자리 창출인원(명)	목표		신규	2	3.3	3.5
	실적		-	3.1		
	달성도		-	155.0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89.4	-	-	81.0	82.0
	실적	77.6	-	-		
	달성도	86.8		-		

자료: 중소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4. 중기부 창업기업자금(융자)(청년전용)¹⁰⁾

중기부 창업기업자금(융자)사업의 연도별 추진 경과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4	- 9,215개 업체/1,340,000백만 원 지원
2015	- 8,166개 업체/1,500,000백만 원 지원
2016	- 10,668개 업체/1,750,000백만 원 지원
2017	- 13,172개 업체/2,050,000백만 원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더불어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표 2-6〉 창업기업자금(융자)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목표	41.3	41.3	폐지	-	-
	실적	47.8	41.5	-	-	-
	달성도	115.7	100.5	-	-	-
창업 1년 미만 업체 매출액 증가율(%)	목표	12.5	13.8	폐지	-	-
	실적	16.1	20.4	-	-	-
	달성도	128.8	147.8	-	-	-
지원업체 고용 증가율(%)	목표	27.7	32.0	37.8	폐지	-
	실적	35.6	42.7	38.2	-	-
	달성도	128.5	133.4	101.1	-	-
지원업체 영업이익 증가율(%)	목표	-	신규	15.7	21.5	22.6
	실적	-	-	17.4	22.3	-
	달성도	-	-	110.8	103.7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10)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5. 중기부 창업선도대학¹¹⁾

중기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연도별 추진 경과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4	629명 지원(616명 창업), 창업강좌 498개(28,613명), 창업동아리 492개
2015	913명 지원(889명 창업), 창업강좌 659개(27,944명), 창업동아리 633개
2016	997명 지원(986명 창업), 창업강좌 857개(33,550명), 창업동아리 885개
2017	1,326명 지원, 창업강좌 1,010개, 창업동아리 1,040개 지원 예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한편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표 2-7〉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창업률(%)	목표	신규	94.9			
	실적	-	95.4			
	달성도	-	100.5			
창업성공률(%)	목표		신규	66.2		
	실적		-	74.9		
	달성도		-	113.1		
평균일자리 창출인원(명)	목표		신규	2	3.3	3.5
	실적		-	3.1		
	달성도		-	155.0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89.4	-	-	81.0	82.0
	실적	77.6	-	-		
	달성도	86.8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11)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6. 중기부 창업인프라 지원¹²⁾

중기부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 경과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4	- BI 노후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 지원: 13개 BI(1,800백만 원) - 보육업체 수: 6,254개, 매출액: 15,840억 원, 고용인원: 18,290명
2015	- BI 노후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 지원: 13개 BI(3,000백만 원) - 보육업체 수: 6,275개, 매출액: 17,330억 원, 고용인원: 18,536명
2016	- BI 노후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 지원: 6개 BI(2,500백만 원) - 보육업체 수: 5,840개, 매출액: 18,389억 원, 고용인원: 18,975명
2017	- BI 노후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 지원: 16개 BI(3,000백만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한편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표 2-8〉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창업보육센터 계속 입주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목표	25.9	27.2	37.3	40.3	39.1
	실적	38.8	42.3	32.4	38.2	-
	달성도	148.8	155.5	89.5	94.8	-
창업보육센터 보육 서비스 만족도(점)	목표	85	88	87	87.3	87.7
	실적	85.1	86.3	88.2	87.4	-
	달성도	100.0	98.1	101.3	100.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7. 중기부 창업저변 확대¹³⁾

중기부 창업저변 확대사업의 연도별 추진 경과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
- 12)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13)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014	청소년비즈니스쿨(300개교), 대학생 창업아카데미(28개 대학, 6,623명 교육, 280개 동아리 2,501명 지원), 일반인 창업아카데미(15개 기관, 1,215명 교육), 창업대학원 운영지원(5개 대학), 대학 기업가센터(6개 대학, 81개 전공과목, 1,271명 교육), 시제품제작터(796업체 1,458건, 셀프제작서비스 64,001건 지원),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센터 및 스쿨 31개 기관, 78개 교육과정)
2015	청소년비즈니스쿨(412개교), 대학생 창업아카데미(21개 대학, 3,945명 교육), 일반인 창업아카데미(14개 기관, 1,104명 교육), 창업대학원 운영지원(5개 대학), 대학 기업가센터(9개 대학),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센터 20개 및 스쿨 9개 기관), 시제품제작터(5개소)
2016	청소년비즈니스쿨(448개교), 대학생 창업아카데미(15개 대학), 일반인 창업아카데미(10개 기관), 창업대학원 운영지원(5개 대학), 대학 기업가센터(9개 대학), 시니어 기술 창업지원(센터 23개 및 스쿨 14개 기관), 시제품제작터(5개소)
2017	청소년비즈니스쿨(504교), 대학생 창업아카데미(7개 대학), 일반인 창업아카데미(4개 기관), 창업대학원 운영지원(5개 대학), 대학 기업가센터(9개 대학), 시니어 기술창업지원(25개 센터), 시제품제작터(5개소), 스마트창업터(20개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더불어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표 2-9〉 창업저변 확대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창업률(%)	목표	신규	94.9			
	실적	-	95.4			
	달성도	-	100.5			
창업성공률(%)	목표		신규	66.2		
	실적		-	74.9		
	달성도		-	113.1		
평균일자리 창출인원(명)	목표		신규	2	3.3	3.5
	실적		-	3.1		
	달성도		-	155.0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89.4	-	-	81.0	82.0
	실적	77.6	-	-		
	달성도	86.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8.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¹⁴⁾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사업의 연도별 추진 경과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4	청년 CEO 284명(팀) 육성(일반회계)
2015	청년 CEO 252명(팀) 육성(일반회계)
2016	청년 CEO 300명(팀) 육성(일반회계)
2017	3월, 7월 입고 후 474명(팀) 졸업예정(중진기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한편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표 2-10〉 창업저변 확대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15	2016	2017	2018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사업화 성공률 (%)	목표	-	신규	38.6	47.4
	실적	-	신규	47.7	-
	달성도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제4절 소 결

현 정부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은 혁신 창업자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생활형 아이디어 및 소셜벤처 창업을 촉진하며,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4)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현재 전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창업지원사업군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19개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의 기준으로 청년 대상 사업으로 식별된 사업은 총 9개인데, 상대적으로 결이 다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을 제외하면 교육부의 대학창업펀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6개 사업(창업사업화 지원, 창업기업자금(융자)(청년전용), 창업선도대학, 창업인프라 지원, 창업저변 확대, 창업성공패키지) 등 총 8개의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창업펀드사업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 계정을 별도로 설치한 후, 동문,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등이 대학창업펀드를 공동 조성하는 경우 매칭 출자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설된 사업으로서 258개의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사업은 관광벤처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017년 투입 예산은 187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시장전문가의 참여 및 선진 사업모델 개발기법을 활용하여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고 도약과 생존율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금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중견·벤처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급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창업팀을 육성한다.

창업사업화 지원은 2017년도 기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1,555개사, 600억 원),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창업벤처기업 449개사, 100억 원),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247개팀, 250억 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선도벤처연계 83개사, 창업인턴제 55명, 120억 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95개사, 53억 원), 스마트벤처캠퍼스(147개팀, 122억 원), 1인 창조기업 활성화(513개사, 122억 원), 판교밸리 창업존 구축(109개사 입주공간 배정), 시니어 창업지원(신규센터 3개소, 47.4억 원, 세대융합캠퍼스 6개소, 127억 원)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사업화 지원은 이처럼 2017년 기준 총 투입 예산이 1,541.4억 원에 달하

는 대규모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자금(융자)사업의 목적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다. 2018년도 사업규모는 전체 창업기업자금(융자) 18,660억 원 중 청년전용으로 1,300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전담 인력, 시험장비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창업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준비부터 창업 후 성장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권역별로 나누어 총 40개 대학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데, 이 중 8개 대학은 2017년에 신규 지정되었다. 2017년에 1,326명을 지원하고, 창업강좌 1,010개 및 창업동아리 1,04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의 목적은 창업보육센터의 건립, 리모델링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지방에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7년에 16개 창업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하였다.

중기부의 창업저변 확대사업의 목적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교육과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 마인드를 확립하고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시제품 제작 등 실질 지원책을 연계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2017년에 청소년비즈쿨(504개교), 대학생 창업아카데미(7개 대학), 일반인 창업아카데미(4개 기관), 창업대학원 운영지원(5개 대학), 대학 기업가센터(9개 대학), 시니어 기술창업지원(25개 센터), 시제품제작터(5개소), 스마트창작터(20개소) 등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기부의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을 통해 제조업 중심 (예비)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창업의 모든 단계를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과 창출형 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때 창업 준비 단계에서 교육 및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창업 실행 단계에서 사업화를 독려하며, 창업 후 성장 단계에서 BI, R&D,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투자지원 등을 시행한다. 2017년 기준 청년 CEO 474명 (팀)을 졸업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청년 대상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자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는 정량지표와는 달리 사업 참여자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관련 정성지표에 있어서는 대체로 목표 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량 및 정성 평가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는 원인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달성이 어렵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여 실적과 비교하는 방식의 정량지표보다는 실제 사업 수혜자들의 주관적 평가가 해당 사업의 여러 측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제 3 장

창업지원정책 효과 정량평가

제1절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이 기업의 고용에 미친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고용과 관련하여 관찰되는 실증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들을 함께 소개할 것이다.

이동주·이윤보·김중운(2011)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 창업률이 지역별 고용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동주 외(2011)의 분석 결과, 지역 인구 1,000명당 1개 기업의 창업이 더 일어날 때 10년 후 고용변화율이 0.062%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년부터 6년 전의 창업률은 고용변화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동주 외(2011)는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이동주 외(2011)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비해 창업에 따른 단기 고용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 효과는 미약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혁신성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동주 외(2011)는 업종별로 볼 때 지식서비스업에서 타 업종에 비해 창업에 따른 10년간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 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창업에 따른 긍정적 고

용효과가 발현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제 전반적으로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을 이동주 외(2011)는 지적하고 있다.

조덕희(2014)는 창업기업의 고용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창업률, 창업기업 생존율, 그리고 창업기업의 성장률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요인에 대해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조덕희(2014)는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이 창업기업의 유형, 즉 기회형 창업인지 생계형 창업인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조덕희(2014)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하락해왔고, 이미 사업체 수가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상황이므로 창업률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기업 생존율이 여러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할 것을 조덕희(2014)는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창업기업의 성장성 역시 저조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처럼 낮은 생존율 및 성장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회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조덕희(2014)는 주장하고 있다.

김정홍·정윤선·박종복·안준기(2014)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사업체 중 창업기업 9만 3천여 개를 골라내고,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 비중 및 무형자산액 비중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창업기업 9,700여 개를 식별하였다. 김정홍 외(2014)가 창업기업의 고용성과 결정요인을 성향점수매칭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술창업기업이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부 지원 여부는 창업기업의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근·김준일·김혜영(2014)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송원근 외(2014)의 분석결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외부감사 대상 전체 기업과 비교할 때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종사자 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만 비교집단을 또 다른 정부지원을 받은 집단인 이노비즈 기

업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오히려 더 적음을 송원근 외(2014)의 분석결과는 보이고 있다.

오계택·류성민(2015)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창업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오계택·류성민(2015)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및 미수혜 집단을 아울러 조사한 결과를 두 집단 간 비교 분석한 결과,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집단의 일자리의 양에 대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는 미수혜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계택·류성민(2015)은 더불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나누어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등 세 가지 세부사업 모두가 수혜기업의 고용규모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재량(2017)은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이 실시한 창업기업실태조사의 2015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고용에 대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남재량(2017)이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부족인원에 대한 답변 내역을 활용한 일종의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부족 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량(2017)은 이러한 결과를 정부의 창업지원이 유의미한 고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세부사업군별로는 시설·공간 지원의 고용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R&D 지원, 창업행사·네트워크, 창업교육 등의 순으로 효과가 있음을 남재량(2017)은 보이고 있다.

이우진·김종철·김가영·엄승권·박경태(2017)는 벤처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창업진흥원(2017)의 「2016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지원을 받은 창업 벤처기업 당 평균 4.1명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러한 일자리 증가율은 일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음을 보이고 있다.

KOTRA(2017)가 KOTRA의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91개 기업에 대해 응답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고용인원이 창업 1년차부터 5년차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6년차에 주춤한 후 7년차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2017)는 이러한 결과를 죽음의 계곡 단계에 이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세경·곽규태(2017)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여부가 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세경·곽규태(2017)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받은 창업지원 액수가 많을수록 종사자 수 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세경·곽규태(2017)의 분석에 따르면 수혜기업의 고용성과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지원 수단은 사업화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창업보육과 창업자금 융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세경·곽규태(2017)는 지원대상이 특화된 정부 지원이 수혜기업의 종사자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창업, 시니어, 그리고 청년에 특화된 정부 지원이 수혜기업 종사자 수 증가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2017년 6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등과 더불어 정부로부터 벤처투자 지원을 수혜한 기업의 고용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벤처 투자를 받은 2,838개 기업을 통틀어 볼 때 2016년 말 기준 투자 지원이 전년도 대비 3만 개가량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혹은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투자 지원이 이루어진 후 1년 사이 고용증가율이 63%에서 72% 이상에 달한다는 결과를 해당 보도자료는 제시하고 있다.

이정현·이희연(2017)은 창업기업의 업종을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 업종별로 창업 이후 연도별 고용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정현·이희연(2017)의 분석결과, 창업에 따른 6년 후 고용 효과는 지식기반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 후 6년차에 이르는 기간 동안 2~4년차 사이에는 지식기반제조업 부문 창업 기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타 업종에서의 창업은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정현·이희연(2017)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창업지원정책에 있어 창업기업의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장균(2017)은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때, 29세 이하의 20대 창업기업 수가 2013~15년 사이 40.5% 급감하였고, 따라서 전체 신생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3.0%에서 2015년에는 0.9%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한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할 때, 2014년 전체 신생기업의 생존율에 비해 20대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음을 이장균(2017)은 보이고 있다.

이장균(2017)은 더불어 창업 업종에 있어서도 20대 창업기업의 경우 생계형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비중이 타 연령대 창업기업에 비해 높고, 정책지원 인증 기준 혁신형 창업 및 기술기반 업종에서의 창업 비율 역시 타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평균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이 낮은 업종에 20대 창업기업이 몰려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비율도 92%에 달하고 있음을 이장균(2017)은 지적한다. 이장균(2017)은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혁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대 초기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 지원이 절실함을 역설하였다.

양현봉·한창용·김진수(2018)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그 외 일반 창업기업 간 비교를 기초통계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양현봉 외(2018)는 이를 위해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수집하는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자료」를, 미참여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참조하여 각각의 시계열을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양현봉 외(2018)가 이들 두 집단 간 고용창출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2009년부터 2016년

에 이르기까지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반면, 그렇지 않은 일반 창업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현봉 외(2018)는 이러한 결과를 정부 창업지원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정부의 창업지원이 생계형 창업이 아닌 지식·기술집약형 창업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하면서 향후 정부의 창업지원도 해당 분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 절에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존의 정부 창업지원정책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실증적 사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창업지원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한 연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자연실험적 방법론 등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아직 많지 않은 게 현실이므로, 긍정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존 창업기업들의 창업 후 연차 및 업종 등에 따른 고용변화 양상을 볼 때, 지원 대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요구됨을 많은 선행연구에서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 창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창업 유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평가방법

본 절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일자리 측면, 특히 청년층 일자리에 대해 갖는 정책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와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창업지원 분야 중 특정 세부사업에 초

점을 맞추기보다, 청년 창업지원정책 전반의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 적절한 분석방법을 통해 정량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개별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유형을 활용하여, 정부사업 참여 관련 유형 및 기타 유형 간 고용성장에 차이가 나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¹⁵⁾

본 정량평가에 활용될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원자료는 국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 현황, 인력 및 조직 현황, 기업 일반 현황 등에 대해, 2014년 12월 말 기준 29,844개의 벤처확인 기업 모집단 중 2,049개 유효 표본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기업별 인력 현황에 있어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더불어 성별에 따라 구분된 종사자 수를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관리, 생산, 영업, R&D 등 직군별로 구분된 종사자 수 및 학력별 인력 구성 비율 역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할 때, 연령대별 종사자 수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아쉬운 대목이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의 조사 대상인 벤처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을 의미하는 만큼, 현재 정부가 청년층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에서 정부지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장균(2017)이 지적하듯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의 경우 혁신형 창업 및 기술기반 업종에서 창업 비율이 평균에 비해 낮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량 평가는 전체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평가하는 것이라기보다, 향후 정책적으로 정부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부문에서

15)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로부터 창업 시 소요 자금을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달한 비중 및 연령대별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 청년층 고용성과 간 관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해당 조사결과 원자료 입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통계 생산자가 통계 생산 초기 불안정성을 이유로 원자료 제공에 난색을 표명하였음을 밝힌다.

현재 지원방식이 과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에서 정부의 정책지원 여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은 조사 대상연도에 출연, 용자, 보증서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았는지, 만약 받았다면 그 액수가 얼마였는지 응답하도록 한 부분이다. 다만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내역이 조사 대상기업의 창업 시기부터 현재까지 정부 정책 지원이력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위한 정책 지원변수를 생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로부터 각 기업의 정책지원 수혜 여부를 판정하는 데 가장 크게 참조하고자 하는 변수는 조사 대상기업의 벤처확인 유형이다. 벤처확인의 네 가지 유형은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으로 나뉜다. 이때 기술평가대출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정책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은 정부의 정책지원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벤처인 홈페이지, <http://www.venturein.or.kr> 참조). 본 연구는 이러한 벤처확인 유형에 있어서 정책지원과의 관련성이 차별화되는 점에 착안하여 정량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과연 개별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시점을 창업 초기 단계 이전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특정 기업이 일정 수준 성장을 이루고 사업 안정기에 들어선 성과를 기반으로 벤처확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창업 지원에 따른 개별 기업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방향이 뒤엎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이미 일정 성과를 달성한 기업이 아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정부 지원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기업으로 정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벤처인 홈페이지, <https://www.venturein.or.kr> 참조), 이러한 역인과 관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이러한 우려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 향후 제시될 핵심 정량분석에서는 기업 연령이 10년 이내인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는

2006년 6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창업 초기에 관련 제도 수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던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정부 정책지원이 청년층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미치는 일자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창업주의 창업 당시 연령대 관련 문항에 대한 답변 내역을 활용할 것이다. 이때 창업주 연령대 보기가 10년 단위로 끊어서 범주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9세 이하와 30대 등 두 개의 범주를 포괄하여 청년층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창업 후 연차, 해당 업종 등에 따라 일자리 관련 양상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로부터 가용한 해당 변수를 통제하여 정책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제3절 평가결과

1. 기초통계

본격적인 정량평가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를 바탕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조사대상 기준 시점은 2014년 12월 31일이다. 기초통계 분석결과는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창업 당시 연령은 40대 부근에 몰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창업방식은 독자적으로 창업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기업당 평균 종사자는 60명 안팎, 대다수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난다. R&D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 정도이고, 대졸 이상이 과반을 차지하며 석박사 인력의 비중은 9% 안팎이다. 기업당 평균 10건 남짓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 3-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기초통계(표본 수 2,049)

변수	산술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창업년도	2003.63	2005	7.36	1955	2015
기업 성장단계 (① 창업기, ② 초기성장기, ③ 고도성장기, ④ 성숙기, ⑤ 쇠퇴기)	3.16	3	0.80	1	5
창업자 성별 (① 남, ② 여)	1.04	1	0.21	1	2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72	3	0.82	1	5
창업방식 (① 기업 분사 또는 계열사, ② 창업보육, ③ 독자 창업)	2.91	3	0.36	1	3
2014년 총 종사자 수	58.58	36	69.11	0	1,204
2014년 총 정규직 수	57.65	35	67.92	0	1,204
2014년 총 비정규직 수	0.94	0	12.02	0	496
2015년 총 종사자 수	60.58	40	73.33	6	1,504
2015년 총 정규직 수	59.60	38	72.19	5	1,504
2015년 총 비정규직 수	0.98	0	11.93	0	496
2015년 R&D 인력 수	9.05	5	15.26	0	172
고용인력 대졸 구성비(%)	43.99	40	22.56	0	100
고용인력 석사 구성비(%)	7.39	4	10.79	0	80
고용인력 박사 구성비(%)	1.58	0	5.10	0	50
2014년 매출액(백만 원)	14,207.65	6,326	21,906.78	0	202,480
2014년 영업이익(백만 원)	622.55	234	2,051.91	-14,608	30,621
2015년 매출액(백만 원)	15,011.54	6,921	23,302.31	20	283,324
2015년 영업이익(백만 원)	607.10	233	2,299.97	-24,511	38,157
2015년 정부 정책지원 경험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1.65	2	0.48	1	2
정부 정책지원 총 금액(백만 원, 지원 받은 경우만 응답)	571.07	300	901.48	2	9,990
산업재산권 등록 보유 건수	10.21	4	20.90	0	281

〈표 3-1〉의 계속

변수	산술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주력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 (① 초기 개발단계, ② 시제품 개발단계, ③ 상용화 실현단계, ④ 초기 시장진출단계, ⑤ 시장확대단계)	4.45	5	0.89	1	5
세계 최고수준 기업 대비 기술력 수준 (① 세계 유일기술, ②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 ③ 약간 미흡, ④ 미흡, ⑤ 경쟁열세)	3.02	3	0.84	2	5
국내 최고수준 기업 대비 기술력 수준 (① 국내 유일기술, ②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 ③ 약간 미흡, ④ 미흡, ⑤ 경쟁열세)	2.57	2	0.74	1	5
장기 성장 전망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3.87	4	0.60	1	5
정부/국가연구기관 협력활동 경험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1.75	2	0.43	1	2
벤처확인제도가 정부지원 참여에 유리 (① 전혀 효과 없음, ② 효과 적은 편, ③ 그저 그렇, ④ 효과 있는 편, ⑤ 매우 큰 효과)	3.59	4	0.79	1	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자사의 기술력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비해 약간 미흡하나 국내 최고 수준에는 근접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자평하고 있다.

〈표 3-2〉는 벤처확인 유형별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평균을 보여준다. 기술평가보증기업이 압도적으로 다수이며, 2015년 기준 종사자 수는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에서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은 기업 성장단계별 표본 내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평균을 보여준다. 3단계인 고도성장기, 4단계인 성숙기에 도달한 기업이 가장 많고, 초기성장기에 진입한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자 수 평균은 성숙기 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초기성장기 기업에서 창업기 기업에 비해 종사자 수 평균이 낮은 것은 죽음의 계곡에 진입한 데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성장기 이후로는 기업 성장에 따라 평균 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쇠퇴기 기업에서 다시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 보인다.

<표 3-4>는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대가 40대, 30대였던 기업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음을 보여준다. 창업주 연령대가 20대 이하였던 기업은 상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자 수 평균을 볼 때엔 60대 이상을 제외

<표 3-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벤처확인 유형

벤처확인 유형	기업 수	2015년 종사자 수 평균
기술평가대출기업	116	49.51
기술평가보증기업	1,796	59.98
벤처투자기업	67	81.07
연구개발기업	70	74.66
합 계	2,049	60.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성장단계

기업 성장단계	기업 수	2015년 종사자 수 평균
창업기	29	35.31
초기성장기	397	32.45
고도성장기	870	53.76
성숙기	724	84.44
쇠퇴기	29	80
합계	2,049	60.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창업 시 창업주 연령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대	기업 수	2015년 종사자 수 평균
20대 이하	71	66.61
30대	774	59.45
40대	922	60.10
50대	214	55.87
60대 이상	68	88.47
합계	2,049	60.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하고는 20대 이하인 경우 가장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3-5〉는 창업 방식에 있어 독자적인 창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타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했을 때 가장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창업보육 과정을 거치는 경우 오히려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6〉은 조사 대상연도에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보다 없는 기업이 두 배 가까이 많음을 보여준다. 종사자 수 평균은 정책지원 경험이 있는 기업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3-7〉은 기업의 주력 제품과 관련된 기술 분야별 기업 수를 보여준다. 6대 핵심 기술로 지목된 범주에 속하지 않은 기술 분야의 기업 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속한 기업 수가 많은 것

〈표 3-5〉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창업 방식

창업 방식	기업 수	2015년 종사자 수 평균
대기업 등 타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	53	84
국가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 과정을 거쳐 창업	71	29.25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업	1,925	61.09
합계	2,049	60.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조사연도 정부정책 지원 경험

정책 지원경험	기업 수	2015년 종사자 수 평균
있음	723	62.71
없음	1,326	59.42
합 계	2,049	60.58

자료: 중소기업본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7>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주력제품(서비스)과 관련이 가장 큰 기술

관련이 가장 큰 기술	기업 수	2015년 종사자 수 평균
정보통신기술	725	60.24
바이오기술	168	61.16
나노기술	85	63.84
환경기술	223	42.02
문화컨텐츠 기술	38	54.21
우주항공기술	13	61.23
기타	797	65.91
합 계	2,049	60.58

자료: 중소기업본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으로 나타난다.

<표 3-8>은 주력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개발단계에 있어 대다수의 기업이 최종 단계 혹은 바로 그 전 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 종사자 수는 개발단계 2단계까지 증가하다 4단계까지 감소하고, 다시 5단계에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역시 죽음의 계곡에 도달한 중간 단계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9>와 <표 3-10>은 세계 최고 혹은 국내 최고수준의 기술력에 근접한 기업일수록 평균 종사자 수가 대체로 많은 양상을 보여준다.

<표 3-11>은 정부나 국가연구기관과 협력활동을 경험한 기업보다 경험하지 않은 기업이 세 배 가까이 많음을 보여준다. 종사자 수 평균은 협력 경험에 있는 기업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표 3-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주력제품(서비스) 개발단계

주력제품 개발단계	기업 수	2015년 종사자 수 평균
초기 개발단계	29	21.93
시제품 개발단계	67	41.88
상용화 실현단계	181	37.72
초기 시장진출단계	458	35.62
시장확대단계	1,314	74.24
합 계	2,049	60.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9〉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세계 최고수준 기업 대비 기술력 수준

기술력 수준	기업 수	2015년 종사자 수 평균
세계 유일기술	0	-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	551	68.38
약간 미흡	1,040	63.67
미흡	318	44.08
경쟁 열세	140	44.36
합 계	2,049	60.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1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국내 최고수준 기업 대비 기술력 수준

기술력 수준	기업 수	2015년 종사자 수 평균
국내 유일기술	7	30.57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	1,132	66.12
약간 미흡	687	54.31
미흡	185	56.92
경쟁 열세	38	32.13
합 계	2,049	60.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1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 자료 표본기업의 정부/국가연구기관 협력활동 경험

정부/국가연구기관 협력 경험	기업 수	2015년 종사자 수 평균
있음	508	71.70
없음	1,541	56.91
합 계	2,049	60.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2. 핵심 분석결과

앞서 살펴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정부 창업지원이 벤처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본격적인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때 분석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이나 회귀단절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등 준실험적 방법론(quasi-experimental methodology)의 활용은 어렵다. 더불어 준실험적 방법론의 대안으로 흔히 활용되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의 경우,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굳이 분석에 활용하는 게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때 그 분석 결과가 인과관계(causation)가 아닌 연관관계(association)를 보이는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 이처럼 연관관계 여부만을 검증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창업지원, 특히 벤처기업 지정 관련 정책 지원의 경우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도유망한 기업 위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금부터 수행될 정량평가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이 벤처기업의 성과와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때는 당연히 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 창업지원이 수혜기업의 성과와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때는 정부의 창업 지원이 기업 성과 향상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창업 초기 벤처기업 지정 관련 정책 지원 시 향후 성장 유망한 기업을 선별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에서는 확실히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상의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분석결과에 따라서는 연관관계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가. 창업 10년차 이하 모든 벤처기업 대상 분석결과

1) 벤처확인유형과 고용성과

<표 3-12>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자료에 포함된 총 2,049 개의 벤처기업 중 창업 후 연차가 10년 이하인 기업 940곳에 대해, 각 기업의 벤처확인유형이 2015년 총 종사자 수와 갖는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12>는 아래에서 창업주의 인적 특성 등 기타 통제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하기 전, 핵심 설명변수인 각 기업의 벤처확인유형에 창업 후 연차 관련 변수만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정부의 창업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벤처확인유형인 기술평가대출 혹은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벤처기업의 최근 총 종사자 수가 타 유형의 벤처기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초기 창업지원이 벤처기업의 일자리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벤처기업 선정 관련 정책 지원이 수혜기업의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창업 초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의도하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 중 최소 하나는 구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표 3-12>는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창업 후 연차를 통제함에 있어, 그 일차항뿐만 아니라 이차항과 삼차항까지 함께 통제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표 3-12>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종사자 수(10년차 이하 벤처기업)

종속변수: 2015년 총 종사자 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대출	-11.39 (14.54)	-10.69 (14.45)	-12.47 (14.43)	-12.21 (14.41)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보증	1.82 (12.15)	1.98 (12.08)	1.54 (12.04)	1.39 (12.03)
벤처확인유형: 벤처투자	-4.05 (17.52)	-3.96 (17.41)	-5.75 (17.37)	-6.52 (17.36)
벤처확인유형: 연구개발	생략된 범주			
창업 후 연차		3.44*** (0.97)	-10.00* (5.38)	-41.37** (17.87)
창업 후 연차 제공			1.06** (0.42)	6.73** (3.11)
창업 후 연차 세제공				-0.31* (0.17)
상수	37.17 (11.94)	15.35 (13.37)	53.45*** (20.06)	104.68*** (34.29)
관측 수	940	940	940	940
R ²	0.00	0.02	0.02	0.03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는 기업의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창업 3년차 이후 죽음의 계곡, 그리고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여 안정기에 접어든 단계별로 일자리 창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창업 후 연차 변수의 일차항만을 통제할 때에는 그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차항까지 통제할 때에는 이차항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고 일차항의 추정계수는 약하게나마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차항까지 통제한 모형에서는 삼차항, 이차항 및 일차항의 추정계수가 각각 (-), (+), (-)의 값을 가지면서 대체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표 3-13>은 <표 3-12>에 그 결과가 제시된 분석 모형을, 창업주의

인적 특성 및 업종과 지역 등을 추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강건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13>의 분석결과는 창업주의 인적 특성 및 업종과 지역 더미 등을 추가로 통제한 확장된 추정 모형에서도, 벤처확인유형에 따른 최근 기업별 종사자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표 3-12>의 분석 결과가 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됨을 보여준다. 즉 창업 초기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상정되는 기술평가대출 혹은 기술평가보증 유형의 벤처기업의 2015년 총 종사자 수는, 그렇지 않은 유형의 벤처기업 종사자 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어떤 추정 모형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창업 후 연차 관련 추정계수들 역시 앞서 살펴본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표 3-13>에서 새롭게 추가된 통제변수들 중 창업주의 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창업주의 성별은 모든 추정 모형에서 해당 기업의 최근 고용성과와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우리가 청년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수혜대상으로 간주하는 30대 이하 연령층일 때 창업주가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주가 60대 이상일 때 창업한 경우 대비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일자리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30대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60대 이상일 때 창업한 기업에 비해 추정 모형에 따라 2015년 총 종사자 수가 평균적으로 31~35명 더 적고, 이러한 관계는 어떤 추정 모형을 보더라도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창업주가 20대 이하일 때 창업한 기업은 60대 이상 창업 기업에 비해 2015년 총 종사자 수가 평균 37~44명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관계가 모형 1을 제외하고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지원정책을

-
- 16)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 안정기를 거쳐 쇠퇴기까지 접어든 기업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창업 후 연차의 사차항까지 통제된 모형을 추정해 보았으나, 이 경우 일차항부터 사차항까지 모든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 결과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시 제공 가능하다.

〈표 3-13〉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종사자 수(10년차 이하 벤처기업) : 통제변수 추가

종속변수: 2015년 총 종사자 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대출	-6.01 (15.11)	-12.70 (14.38)	-13.05 (14.40)	-15.96 (14.41)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보증	7.63 (12.88)	0.57 (12.00)	-0.92 (12.01)	-2.73 (12.01)
벤처확인유형: 벤처투자	생략 범주	-7.91 (17.31)	-10.76 (17.33)	-11.66 (17.32)
벤처확인유형: 연구개발	7.33 (17.32)	생략 범주		
창업 후 연차	-37.98** (17.90)	-36.42** (17.90)	-34.80* (17.87)	-34.73* (17.81)
창업 후 연차 제곱	6.23** (3.11)	5.99* (3.11)	5.74* (3.11)	5.67* (3.10)
창업 후 연차 세제곱	-0.28* (0.17)	-0.27 (0.17)	-0.26 (0.17)	-0.26 (0.17)
창업주 남성 더미	10.68 (9.55)	12.57 (9.60)	11.10 (9.62)	9.48 (9.60)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20대 이하	-37.57* (19.97)	-41.42** (20.07)	-43.28** (20.06)	-42.49** (20.01)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30대	-31.10** (14.30)	-32.41** (14.31)	-34.66** (14.31)	-34.45** (14.28)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40대	-22.48 (14.09)	-21.42 (14.09)	-23.18* (14.08)	-22.74 (14.04)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50대	-18.15 (14.78)	-14.85 (14.88)	-15.87 (14.86)	-14.11 (14.82)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60대	생략 범주			
창업 당시 창업주의 현 산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연수		-0.56* (0.32)	-0.60* (0.32)	-0.58* (0.32)
업종 더미 통제	×	×	○	○
지역 더미 통제	×	×	×	○
상수	105.14*** (37.53)	113.09*** (37.78)	106.38*** (38.60)	101.49** (40.15)
관측 수	940	940	940	940
R ²	0.04	0.04	0.05	0.06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떠나갈 때, 지식기반형 혹은 기술형 창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30대 이하 청년층의 창업 유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누누이 강조하듯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와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특별히 30대 이하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만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창업 당시 창업주의 연령대와 기업의 고용성과 간 연관관계는 청년층 창업 유도에 방점이 찍힌 현 창업지원정책의 방향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표 3-13>의 모형 2~4에서는 창업 당시 창업주가 몇 년간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상태였는지에 대한 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직관과는 상반되게, 해당 변수의 추정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단 창업주의 창업 당시 연령대, 즉 창업 이전까지 쌓아 온 사회경험의 대리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해당 분야의 직접적인 경험은 향후 기업의 고용성과와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4장에서 청년 창업자 대상 FGI 결과를 소개할 때에도 일부 창업자들이 직접적인 해당 분야의 경험보다 전반적인 사회경험이 창업 후 성공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음을 볼 것이다. 본 장에서 제시된 정량분석 결과는 이러한 일부 청년 창업자들의 생각이 맞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단순히 유의한 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정적인 관계까지 나타나는 것은, 동종 분야에서 과거 실무경험이 많을수록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 대한 노하우를 더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13>의 모형 3은 지금까지 살펴본 통제변수에 대해 각 벤처기업이 속한 업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모형 4는 업종 더미에 더해 각 벤처기업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역 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업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업종을 크게 8개(① 에너지/의료(기)/정밀, ②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③

통신기기/방송기기, ④ 음식료/섬유/(비)금속, ⑤ 기계/제조/자동차, ⑥ 소프트웨어 개발, ⑦ 정보통신/방송서비스, ⑧ 기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한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지역의 경우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모형 3과 4의 분석결과는 업종 및 지역 더미를 추가하여 통제하더라도, 기존 설명변수 추정계수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표 3-14>~<표 3-15>는 지금까지 2015년 총 종사자 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벤처확인유형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본 것과 달리, 2015년 총 정규직 근로자 수를 종속변수로 놓을 때 분석결과에 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즉 <표 3-14>~<표 3-15>는 단지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표 3-14>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정규직 근로자 수(10년차 이하 벤처기업)

종속변수: 2015년 총 정규직 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 기술평가대출	-13.24 (14.43)	-12.53 (14.35)	-14.33 (14.32)	-14.07 (14.30)
벤처확인유형 : 기술평가보증	1.40 (12.06)	1.56 (11.99)	1.12 (11.95)	0.97 (11.94)
벤처확인유형 : 벤처투자	-4.42 (17.39)	-4.33 (17.28)	-6.13 (17.24)	-6.90 (17.23)
벤처확인유형 : 연구개발	생략 범주			
창업 후 연차		3.47*** (0.97)	-10.09* (5.34)	-41.55** (17.73)
창업 후 연차 제곱			1.07*** (0.41)	6.76** (3.09)
창업 후 연차 세제곱				-0.31* (0.17)
상수	37.03*** (11.85)	15.08 (13.27)	53.48*** (19.91)	104.85*** (34.03)
관측 수	940	940	940	940
R ²	0.00	0.02	0.02	0.03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15)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정규직 근로자 수(10년차 이하 벤처기업)
: 통제변수 추가

종속변수: 2015년 총 정규직 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대출	-7.36 (15.00)	-14.51 (14.28)	-14.88 (14.31)	-17.69 (14.32)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보증	7.67 (12.79)	0.19 (11.92)	-1.32 (11.93)	-3.10 (11.93)
벤처확인유형: 벤처투자	생략 범주	-8.24 (17.19)	-11.08 (17.22)	-12.02 (17.22)
벤처확인유형: 연구개발	7.72 (17.20)	생략 범주		
창업 후 연차	-38.41** (17.77)	-37.03** (17.78)	-35.38** (17.75)	-35.33** (17.70)
창업 후 연차 제곱	6.29** (3.09)	6.08** (3.09)	5.83* (3.09)	5.76* (3.08)
창업 후 연차 세제곱	-0.29* (0.17)	-0.28* (0.17)	-0.27 (0.17)	-0.26 (0.17)
창업주 남성 더미	10.34 (9.48)	12.02 (9.53)	10.52 (9.56)	8.99 (9.54)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20대 이하	-37.87* (19.83)	-41.29** (19.93)	-43.05** (19.92)	-42.27** (19.89)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30대	-31.11** (14.20)	-32.27** (14.21)	-34.55** (14.22)	-34.33** (14.19)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40대	-22.97 (13.99)	-22.03 (13.99)	-23.82* (13.98)	-23.38* (13.96)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50대	-19.63 (14.67)	-16.71 (14.78)	-17.77 (14.76)	-16.08 (14.73)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60대	생략 범주			
창업 당시 창업주의 현 산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연수		-0.49 (0.32)	-0.53 (0.32)	-0.51 (0.32)
업종 더미 통제	×	×	○	○
지역 더미 통제	×	×	×	○
상수	106.21*** (37.26)	114.48*** (37.52)	108.18*** (38.34)	103.84*** (39.90)
관측 수	940	940	940	940
R ²	0.04	0.04	0.05	0.06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질적인 측면까지 감안하여 고용성과를 비교할 때에도 앞서 본 것처럼 정부의 창업지원이 고용성과와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지 못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표 3-14>~<표 3-15>에서 일자리의 질까지 감안하여 최근 각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벤처확인유형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앞서 총 종사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와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정부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벤처확인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의 기업 간 최근 고용성과에는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기타 통제변수의 추정계수에 대해서도 별다른 질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창업 후 연차와 관련된 변수들의 추정계수에 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고, 창업주의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도 종속변수 변경이 질적인 변화를 거의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창업주의 창업 당시 해당 업종 실무경험 연수를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계수는 여전히 음의 부호를 가지나, 종속변수가 총 종사자 수일 때와는 달리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2) 벤처확인유형과 재무성과

앞서 살펴본 결과는 창업 초기 지식기반형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향후 해당 기업의 고용성과와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창업지원이 지원 받은 기업의 재무성과와도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지 여부이다.

<표 3-16>은 창업 10년차 이하 벤처기업의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매출액 간 연관관계를, <표 3-17>은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영업이익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앞서 고용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할 때와는 달리 확장된 모형의 분석결과만을 제시한다.

<표 3-16>과 <표 3-17>에 제시된 핵심 분석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기업의 벤처확인유형이 최근 고용성과와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무성과와도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표 3-16〉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매출액(10년차 이하 벤처기업)

중속변수: log(2015년 매출액, 백만 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대출	-0.26 (0.32)	-0.01 (0.30)	-0.13 (0.29)	-0.18 (0.29)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보증	0.08 (0.27)	0.32 (0.25)	0.26 (0.25)	0.20 (0.24)
벤처확인유형: 벤처투자	생략 범주	0.23 (0.36)	0.15 (0.35)	0.06 (0.35)
벤처확인유형: 연구개발	-0.24 (0.36)	생략 범주		
창업 후 연차	-0.54 (0.37)	-0.51 (0.37)	-0.62* (0.37)	-0.60* (0.36)
창업 후 연차 제공	0.11 (0.07)	0.10 (0.07)	0.12* (0.06)	0.11* (0.06)
창업 후 연차 세제공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0)
창업주 남성 더미	0.36* (0.20)	0.39* (0.20)	0.47** (0.20)	0.41** (0.19)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20대 이하	-0.52 (0.42)	-0.58 (0.42)	-0.53 (0.41)	-0.62 (0.40)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30대	-0.33 (0.30)	-0.35 (0.30)	-0.24 (0.29)	-0.30 (0.29)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40대	-0.04 (0.30)	-0.03 (0.30)	-0.00 (0.29)	-0.07 (0.28)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50대	0.19 (0.31)	0.24 (0.31)	0.24 (0.30)	0.24 (0.30)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60대	생략 범주			
창업 당시 창업주의 현 산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연수		-0.01 (0.01)	-0.01* (0.01)	-0.01* (0.01)
업종 더미 통제	×	×	○	○
지역 더미 통제	×	×	×	○
상수	8.19*** (0.79)	7.96*** (0.79)	8.25*** (0.79)	8.00*** (0.80)
관측 수	940	940	940	940
R ²	0.09	0.09	0.14	0.19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17〉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영업이익(10년차 이하 벤처기업)

종속변수 : log(2015년 영업이익, 백만 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 기술평가대출	-0.01 (0.36)	-0.01 (0.36)	-0.06 (0.36)	-0.12 (0.35)
벤처확인유형 : 기술평가보증	0.10 (0.31)	0.10 (0.31)	0.06 (0.30)	-0.01 (0.30)
벤처확인유형 : 벤처투자	-0.12 (0.44)	-0.12 (0.44)	-0.09 (0.44)	-0.24 (0.43)
벤처확인유형 : 연구개발	생략 범주			
창업 후 연차	-1.38*** (0.48)	-1.39*** (0.48)	-1.46*** (0.47)	-1.33*** (0.46)
창업 후 연차 제공	0.23*** (0.08)	0.24*** (0.08)	0.25*** (0.08)	0.22*** (0.08)
창업 후 연차 세제공	-0.01*** (0.00)	-0.01*** (0.00)	-0.01*** (0.00)	-0.01*** (0.00)
창업주 남성 더미	0.34 (0.23)	0.33 (0.23)	0.42* (0.23)	0.37* (0.23)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 20대 이하	-0.31 (0.52)	-0.30 (0.52)	-0.34 (0.51)	-0.48 (0.50)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 30대	-0.60* (0.36)	-0.60* (0.36)	-0.49 (0.36)	-0.52 (0.35)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 40대	-0.25 (0.36)	-0.25 (0.36)	-0.23 (0.35)	-0.28 (0.35)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 50대	-0.22 (0.37)	-0.23 (0.38)	-0.22 (0.37)	-0.17 (0.37)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 60대	생략 범주			
창업 당시 창업주의 현 산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연수		0.00 (0.01)	-0.00 (0.01)	-0.00 (0.01)
업종 더미 통제	×	×	○	○
지역 더미 통제	×	×	×	○
상수	7.46*** (0.99)	7.46*** (0.99)	7.62*** (0.99)	7.13*** (0.99)
관측 수	793	793	793	793
R ²	0.05	0.05	0.10	0.13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성과를 고용 측면에서 보든 재무지표 관점에서 바라보든 관계없이, 정부의 벤처기업 대상 창업지원정책이 수혜기업의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했거나, 혹은 향후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데 실패했거나 최소한 둘 중 하나에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가 매출액일 때와 영업이익일 때 사이의 큰 차이는 창업 후 연차 관련 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이다. <표 3-16>에서 종속변수가 매출액인 경우에는 창업 후 연차의 1, 2, 3차항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약하게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표 3-17>에서 종속변수가 영업이익일 때에는 창업 후 연차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앞서 종속변수가 고용성과일 때와 유사한 부호를 갖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고용 변화 추이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재무성과 지표가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창업 당시 창업주의 연령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와 는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청년층일 때 창업한 기업의 고용성과가 상당히 강한 유의성을 보이면서 더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창업 시점에서 창업주의 연령대가 재무성과가 아닌 고용성과에만 강하게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갖는 이유를 현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창업 이전 창업주의 전반적인 사회경험 차이로 인해, 유사한 재무성과하에서도 고용 관련 결정이 차별화되는 양상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창업 전 현재 업종에서의 실무경험은 영업이익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고 매출액에 대해서만 일부 모형에서 약하게 유의한 음(-)의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창업 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대상 분석결과

1) 벤처확인유형과 고용성과

위에서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창업 10년차 이하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제 현재 지식기반형 창업에 있어 청년층의 창업을 독려하는 정부의 정책 기초를 감안하여, 분석대상을 창업 10년차 이하 중 창업 시점에 창업주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였던 기업들로 국한하여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표 3-18>~<표 3-21>은 창업 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306곳의 최근 고용성과가 벤처확인유형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종속변수를 2015년 총 종사자 수로 놓을 때와 총 정규직 근로자 수로 설정할 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8>~<표 3-21>은 창업 10년차 이하 벤처기업 중 창업주가 30

<표 3-18>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종사자 수(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종속변수: 2015년 총 종사자 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대출	6.84 (16.26)	7.77 (16.22)	6.93 (16.22)	7.08 (16.27)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보증	14.00 (13.23)	14.65 (13.19)	15.35 (13.19)	15.53 (13.25)
벤처확인유형: 벤처투자	생략 범주			
벤처확인유형: 연구개발	0.44 (17.21)	0.35 (17.16)	1.18 (17.15)	1.25 (17.18)
창업 후 연차		1.76* (1.04)	-6.36 (6.41)	-1.85 (25.42)
창업 후 연차 제공			0.62 (0.48)	-0.15 (4.20)
창업 후 연차 세제공				0.04 (0.22)
상수	18.22 (13.01)	6.32 (14.77)	29.51 (23.33)	21.28 (50.62)
관측 수	306	306	306	306
R ²	0.01	0.02	0.02	0.02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19〉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종사자 수(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 통제변수 추가

종속변수: 2015년 총 종사자 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대출	7.37 (16.37)	8.08 (16.25)	7.94 (16.30)	16.23 (16.30)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보증	14.63 (13.49)	16.12 (13.41)	17.69 (13.46)	21.60 (13.28)
벤처확인유형: 벤처투자	생략 범주			
벤처확인유형: 연구개발	1.95 (17.22)	2.86 (17.11)	3.98 (17.14)	10.00 (16.93)
창업 후 연차	-5.07 (25.64)	-8.43 (25.51)	-7.71 (25.49)	-9.66 (25.10)
창업 후 연차 제공	0.44 (4.24)	1.00 (4.22)	0.97 (4.22)	1.13 (4.16)
창업 후 연차 세제공	0.01 (0.22)	-0.02 (0.22)	-0.02 (0.22)	-0.03 (0.22)
창업주 남성 더미	6.01 (11.30)	6.88 (11.22)	생략 범주	
창업주 여성 더미	생략 범주		-2.94 (11.37)	0.02 (11.21)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20대 이하	-7.73 (9.21)	-13.66 (9.51)	-14.33 (9.55)	-15.27 (9.40)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30대	생략 범주			
창업 당시 창업주의 현 산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연수		-1.19** (0.52)	-1.30** (0.53)	-1.25** (0.52)
업종 더미 통제	×	×	○	○
지역 더미 통제	×	×	×	○
상수	22.18 (51.60)	35.54 (51.56)	30.78 (51.27)	16.31 (51.78)
관측 수	306	306	306	306
R ²	0.03	0.04	0.07	0.12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20>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정규직 근로자 수(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종속변수: 2015년 총 정규직 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 기술평가대출	7.51 (16.25)	8.44 (16.21)	7.61 (16.21)	7.78 (16.25)
벤처확인유형 : 기술평가보증	14.51 (13.22)	15.16 (13.18)	15.86 (13.18)	16.06 (13.24)
벤처확인유형 : 벤처투자	생략 범주			
벤처확인유형 : 연구개발	1.03 (17.20)	0.93 (17.15)	1.75 (17.14)	1.83 (17.17)
창업 후 연차		1.77* (1.04)	-6.29 (6.41)	-1.32 (25.40)
창업 후 연차 제공			0.61 (0.48)	-0.23 (4.20)
창업 후 연차 세제공				0.04 (0.22)
상수	17.56 (13.00)	5.53 (14.76)	28.55 (23.32)	19.49 (50.58)
관측 수	306	306	306	306
R ²	0.01	0.02	0.02	0.02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대 이하일 때 창업한 기업의 최근 고용성과와 벤처확인유형 간의 연관관계에 있어, 전체 창업 10년차 이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분석결과가 도출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표 3-21>의 모형 4에서 기술평가보증 유형 변수의 추정계수가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중에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은 유형의 기업의 고용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청년층 창업기업 중에서도 창업주가 20대 이하일 때 창업한 기업과 30대일 때 창업한 기업 사이에 고용성과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표 3-

〈표 3-21〉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총 정규직 근로자 수(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 통제변수 추가

종속변수: 2015년 총 정규직 수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대출	8.12 (16.35)	8.84 (16.24)	8.78 (16.28)	16.95 (16.29)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보증	15.21 (13.48)	16.71 (13.40)	18.33 (13.44)	22.18* (13.27)
벤처확인유형: 벤처투자	생략 범주			
벤처확인유형: 연구개발	2.56 (17.21)	3.47 (17.09)	4.61 (17.12)	10.56 (16.92)
창업 후 연차	-4.62 (25.62)	-7.98 (25.48)	-7.19 (25.46)	-9.14 (25.08)
창업 후 연차 제곱	0.37 (4.24)	0.93 (4.21)	0.88 (4.22)	1.05 (4.15)
창업 후 연차 세제곱	0.01 (0.22)	-0.02 (0.22)	-0.02 (0.22)	-0.02 (0.22)
창업주 남성 더미	5.82 (11.29)	6.69 (11.21)	생략 범주	
창업주 여성 더미	생략 범주		-2.67 (11.36)	0.25 (11.20)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20대 이하	-8.06 (9.21)	-13.99 (9.50)	-14.65 (9.54)	-15.58* (9.39)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30대	생략 범주			
창업 당시 창업주의 현 산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연수		-1.20** (0.52)	-1.30** (0.53)	-1.26** (0.52)
업종 더미 통제	×	×	○	○
지역 더미 통제	×	×	×	○
상수	20.72 (51.56)	34.09 (51.52)	29.07 (51.21)	14.88 (51.75)
관측 수	306	306	306	306
R ²	0.03	0.04	0.08	0.12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19>와 <표 3-21>에서 살펴보면, 20대 이하 창업 더미의 추정계수가 항상 음의 부호를 갖기는 하지만 단 하나의 모형에서 약한 유의성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년층 창업자 내에서 20대 이하와 30대 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앞서 10년차 이하 창업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비교하여 청년층 창업기업만을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흥미로운 차이는, 창업 시점에서 창업주가 30대 이하였던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후 연차 관련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 동종업종에서 실무경험 변수의 추정계수 부호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의 값을 갖는데, 그 통계적 유의성은 10년차 이하 기업 전체에서보다 더 뚜렷해졌음을 볼 수 있다.

2) 벤처확인유형과 재무성과

이제 창업 후 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의 벤처확인유형과 재무성과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나타나고, 고용성과를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할 때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3-22>와 <표 3-23>은 10년차 이하 창업기업 중 창업 시점에서 창업주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였던 기업의 201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들 기업의 벤처확인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22>와 <표 3-23>은 창업 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확인유형과 최근 재무성과 사이에 특별히 강하게 유의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표 3-22>에서 매출액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과 관련되지 않은 벤처확인유형과 강하게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모형이 있으나, 기존 통제변수에 지역 더미까지 추가로 통제한 모형 4에서는 이러한 유의한 관계가 사라지므로, 명확한 관계가 드러났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위에서 벤처확인유형과 고용성과 간에 유의한 연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더해, 재무성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벤처확인유형이 강하게 유의한 관계

〈표 3-22〉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매출액(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종속변수: log(2015년 매출액, 백만 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대출	-0.95* (0.55)	-0.94* (0.55)	-1.05* (0.54)	-0.71 (0.53)
벤처확인유형: 기술평가보증	-0.40 (0.45)	-0.38 (0.45)	-0.37 (0.44)	-0.19 (0.43)
벤처확인유형: 벤처투자	생략 범주			
벤처확인유형: 연구개발	-1.23** (0.58)	-1.21** (0.58)	-1.14** (0.56)	-0.88 (0.55)
창업 후 연차	0.67 (0.86)	0.60 (0.86)	0.48 (0.84)	0.44 (0.81)
창업 후 연차 제공	-0.10 (0.14)	-0.09 (0.14)	-0.07 (0.14)	-0.07 (0.13)
창업 후 연차 세제공	0.01 (0.01)	0.01 (0.01)	0.00 (0.01)	0.00 (0.01)
창업주 남성 더미	0.43 (0.38)	0.44 (0.38)	생략 범주	
창업주 여성 더미	생략 범주		-0.40 (0.37)	-0.26 (0.36)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20대 이하	-0.10 (0.31)	-0.21 (0.32)	-0.30 (0.31)	-0.33 (0.30)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30대	생략 범주			
창업 당시 창업주의 현 산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연수		-0.02 (0.02)	-0.03 (0.02)	-0.02 (0.02)
업종 더미 통제	×	×	○	○
지역 더미 통제	×	×	×	○
상수	6.21*** (1.74)	6.47*** (1.75)	6.78*** (1.69)	6.10*** (1.68)
관측 수	306	306	306	306
R ²	0.10	0.11	0.18	0.25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표 3-23〉 벤처확인유형과 2015년 영업이익(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종속변수 : log(2015년 영업이익, 단위 : 백만 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확인유형 : 기술평가대출	0.35 (0.64)	0.37 (0.64)	0.28 (0.63)	0.29 (0.63)
벤처확인유형 : 기술평가보증	0.89* (0.51)	0.92* (0.51)	0.83 (0.50)	0.69 (0.50)
벤처확인유형 : 벤처투자	1.19* (0.68)	1.18* (0.68)	1.09 (0.66)	0.83 (0.66)
벤처확인유형 : 연구개발	생략 범주			
창업 후 연차	0.45 (1.05)	0.41 (1.05)	0.28 (1.02)	0.24 (1.01)
창업 후 연차 제공	-0.05 (0.17)	-0.04 (0.17)	-0.02 (0.17)	-0.02 (0.17)
창업 후 연차 세제공	0.00 (0.01)	0.00 (0.01)	0.00 (0.01)	0.00 (0.01)
창업주 남성 더미	0.13 (0.48)	0.19 (0.48)	0.11 (0.47)	0.06 (0.47)
창업주 여성 더미	생략 범주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 20대 이하	0.42 (0.39)	0.28 (0.40)	0.12 (0.39)	0.02 (0.39)
창업 당시 창업주 연령 : 30대	생략 범주			
창업 당시 창업주의 현 산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연수		-0.03 (0.02)	-0.03 (0.02)	-0.03 (0.02)
업종 더미 통제	×	×	○	○
지역 더미 통제	×	×	×	○
상수	2.72 (2.09)	2.95 (2.09)	3.53* (2.07)	3.49* (2.10)
관측 수	258	258	258	258
R ²	0.05	0.06	0.14	0.18

주 :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중소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는 나타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종속변수를 재무성과로 놓을 때에도 창업 후 연차 관련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종속변수를 고용성으로 설정하여 분석할 때와 유사하다. 더불어 종속변수가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관계없이 창업 시점에서 창업주 연령대가 20대 이하인지 30대인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종속변수가 고용성일 때 창업 연령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과 유사하다.

한편 창업 전 창업주가 동종 업종에서 쌓은 실무경험은 재무성과와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고용성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음의 연관관계가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즉 창업 시점의 창업주 연령대에 의해 대표되는 전반적인 사회경험이 유사하다면 같은 업종에서 쌓은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는 재무성과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반면, 유사한 재무성과하에서 동종 업종에서의 경험이 많을수록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개별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유형을 활용하여, 정부사업 참여 관련 유형 및 기타 유형 간 고용성과에 차이가 나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정량평가를 수행하였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의 조사대상인 벤처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을 의미하는 만큼, 현재 정부가 청년층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에서 정부지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자료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로부터 각 기업의 정책지원 수혜 여부를 판정하는 데 참조하는 변수는 조사 대상기업의 벤처확인 유형이다. 벤처확인 4가지 유형은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으로 나뉜다. 이때 기술평가대출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정책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은 정부의 정책지원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본 장의 정량분석에서는 기업 연령이 10년 이내인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2006년 6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창업 초기에 관련 제도 수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던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정부 정책지원이 청년층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미치는 일자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주의 창업 당시 연령대 관련 문항에 대한 답변 내역을 활용하였다. 이때 창업주 연령대가 30대 이하인 경우를 청년층 창업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창업 10년차 이하인 모든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확인유형과 고용성과(총 종사자 수 및 총 정규직 근로자 수)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창업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벤처확인유형인 기술평가대출 혹은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벤처기업의 최근 고용성과가 타 유형의 벤처기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벤처기업 선정 관련 정책 지원이 수혜기업의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창업 초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의도하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 중 최소 하나는 구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청년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수혜대상으로 간주하는 30대 이하 연령층일 때 창업주가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주가 60대 이상일 때 창업한 경우 대비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일자리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지원정책을 펴나갈 때, 지식기반형 혹은 기술형 창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30대 이하 청년층의 창업 유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창업 당시 창업주가 몇 년간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상태였는지에 대한 변수의 추정계수는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단 창업주의 창업 당시 연령대, 즉 창업 이전까지 쌓아 온 사회경험의 대리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해당 분야의 직접적인 경험은 향후 기업의 고용성과와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창업 10년차 이하 모든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확인유형이 재무성과(매출액 및 영업이익)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벤처확인유형이 최근 고용성과와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무성과와도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성과를 고용 측면에서 보는 재무지표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계없이, 정부의 벤처기업 대상 창업지원정책이 수혜기업의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했거나, 혹은 향후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데 실패했거나 최소한 둘 중 하나에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창업 후 연차 관련 변수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고용 변화 추이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재무성과 지표가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더불어 창업 당시 창업주의 연령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와는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일 때 창업한 기업의 고용성과가 유의하게 더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창업 이전 창업주의 전반적인 사회경험 차이로 인해, 유사한 재무성과하에서도 고용 관련 결정이 차별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창업 전 현재 업종에서의 실무경험은 영업이익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고 매출액에 대해서만 일부 모형에서 약하게 유의한 음(-)의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을 창업 10년차 이하 중 창업 시점에 창업주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였던 기업들로 국한하여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중에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은 유형의 기업의 고용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창업 후 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의 벤처확인유형과

재무성과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특별히 강하게 유의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제 4 장

청년층 창업환경 및 정책 지원실태 분석

본 장에서는 현재 청년층이 창업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여러 장애요인 등 창업환경 및 현행 창업지원정책의 한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두 차례의 FGI 결과, 그리고 해당 목적에 적절한 자료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된 기초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제3장에서 수행된 정책효과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가 도출된 배경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청년 창업자 FGI 결과 분석

1. FGI 개요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질적 분석의 일환으로서, 11월 15일과 16일 2회에 걸쳐 각 회마다 8명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2시간씩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청년 창업자’는 창업 당시 만 39세 이하였던 이들로 정의하였다.

이때 각 FGI에 참여하는 8명의 청년 창업자 중 6인은 창업 전후로 정

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수혜자, 나머지 2인은 창업 전후 정부 창업 지원을 받지 않은 이들로 섭외하였다. 이때 생계형 창업자는 좌담회 참석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식기반제조업 혹은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 창업자들만을 선별하였다. 좌담회 2회 모두 FGI 섭외 및 개최 관련 위탁을 담당한 전문 조사업체의 FGI룸에서 개최하였다.

1차와 2차 FGI 간 차이점은, 1차 좌담회에서는 창업 1~2년차 기업의 창업주를 대상으로 한 반면, 2차 FGI에서는 창업 3년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섭외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참석 대상의 차이를 반영하여 일부 인터뷰 질문의 차별화 역시 이루어졌다. 이러한 두 차례 FGI의 설문 가이드라인은 각각 다음과 같다.

<1차 FGI 가이드라인>

□ 개요

- 일시/장소 : 2018. 11. 15(목) 오후 7~9시, 서울 나우엔퓨처 회의실
- 조사대상/규모 : 창업 후 3년 미만 경과한 청년 창업자 총 8인
(창업지원정책 수혜 6인+독자 창업 2인)
- 사회자 : 조사업체에서 섭외한 전문 사회자

□ Warm-up(10분/10분)

- 조사 목적 및 진행방법 설명
 - 본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층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연구보고서에 현장의 목소리로서 반영될 예정
 - 창업 환경 전반 및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솔직한 의견 제시
 - 녹음은 되지만 신상은 비공개
 - 참석자 모두가 응답하기
- 사회자 및 참석자 소개
 -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업종 및 간략한 현황 중심으로 짧게 본인 소개. 그 외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본 회의 내 별도 논의 시간이 있음을 전달

□ (창업 애로점) 창업자로서 창업 과정에서 몸소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 이때 정부 정책지원 관련 문제는 본 회의 내에서 별도 논의할 것임을 전달(30분/40분)

- 대한민국의 창업 환경 전반을 고려할 때, 창업을 결심하여 실제 창업 후 지금까지 기업을 끌고 오기까지 어떤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지 논의

- (창업지원을 받은 6인 대상) 창업 전후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도움 및 한계점 등에 대한 논의(30분/70분)
- 어떤 창업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았고, 해당 정책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지자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2인 대상)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것이 창업 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 수혜를 받은 당시에 느꼈던 정부 지원의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향후 어떻게 보완되기를 희망하는지?
- (창업지원을 받지 않은 2인 대상)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논의(10분/80분)
- 여러 가용한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았더라면 창업 과정이 더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 본인은 정책 수혜를 받지 않았지만, 향후 후배 창업자들에게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할 수 있으려면 현행 정부의 창업 지원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향후 기업 성장단계 경과) 창업 초기를 지나 성장기 단계에 진입한 이후와 관련된 논의(20분/100분)
-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창업 1~2년차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향후 소위 죽음의 계곡 단계를 무사히 지나 성장을 지속하여 자리를 확실히 잡기 위해 중요한 요인, 그리고 정부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논의
- (최적 창업 시점) 이미 창업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최적 창업 시점에 대한 논의(10분/110분)
-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초점은 가능한 한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일찍 창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임. 이미 창업한 선배 창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연령이나 사회경험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시점에 창업을 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 Wrap up(10분/120분)
- 연구진 추가 질문 및 답변
 - 참석자별 마무리 발언

<2차 FGI 가이드라인>

□ 개요

- 일시/장소 : 2018. 11. 16(금) 오후 7~9시, 서울 나우엔퓨처 회의실
- 조사대상/규모 :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청년 창업자 총 8인
(창업지원정책 수혜 6인 + 독자 창업 2인)
- 사회자 : 조사업체에서 섭외한 전문 사회자

□ Warm-up(10분/10분)

- 조사 목적 및 진행방법 설명
 - 본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층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연구보고서에 현장의 목소리로서 반영될 예정
 - 창업 환경 전반 및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솔직한 의견 제시
 - 녹음은 되지만 신상은 비공개
 - 참석자 모두가 응답하기
- 사회자 및 참석자 소개
 -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업종 및 간략한 현황 중심으로 짧게 본인 소개. 그 외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본 회의 내 별도 논의 시간이 있음을 전달

□ (창업 애로점) 창업자로서 창업 과정에서 몸소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 이 때 정부 정책지원 관련 문제는 본 회의 내에서 별도 논의할 것임을 전달(30분/40분)

- 대한민국의 창업 환경 전반을 고려할 때, 창업을 결심하여 실제 창업 후 3년차 이상까지 기업을 끌고 오기까지 어떤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지 논의

□ (창업지원을 받은 6인 대상) 창업 전후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도움 및 한계점 등에 대한 논의(30분/70분)

- 어떤 창업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았고, 해당 정책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것이 창업 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 수혜를 받은 당시에 느꼈던 정부 지원의 한계는 무엇이었고, 향후 어떻게 보완되기를 희망하는지?

□ (창업지원을 받지 않은 2인 대상)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논의(10분/80분)

- 여러 가용한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았더라면 창업 과정이 더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 본인은 정책 수혜를 받지 않았지만, 향후 후배 창업자들에게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할 수 있으려면 현행 정부의 창업 지원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죽음의 계곡)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통과와 관련된 논의(20분/100분)
 -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창업 3~7년차에 해당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단계를 무사히 지나 창업기업이 성장하여 자리를 확실히 잡기 위해 중요한 요인, 그리고 정부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
- (최적 창업 시점) 이미 창업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최적 창업 시점에 대한 논의(10분/110분)
 -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초점은 가능한 한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일찍 창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임. 이미 창업하여 3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 온 선배 창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연령이나 사회경험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시점에 창업을 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 Wrap up(10분/120분)
 - 연구진 추가 질문 및 답변
 - 참석자별 마무리 발언

2. FGI 결과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두 차례의 FGI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창업환경에서 몸소 겪은 창업의 애로점, 정부의 창업지원이 창업기업에 제공하는 도움 및 한계점, 정부 창업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창업 3년 이후 소위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이미 창업한 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적 창업 시점, 기타 회의 중에 부각된 중요 이슈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창업환경으로 인한 창업 애로점

청년 창업자 대상 좌담회 참석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창업기업이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정책의 빈번한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지식기반제조업 부문 창업자의 경우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더라도 의뢰받은 업체의 입장에서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납품을 신속하게 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창업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자를 못 만나 창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가게 파탄 우려 때문에 가족들의 창업 반대가 강하고, 직장을 다니다 창업을 결심하는 경우 만약 창업이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나. 정부 창업지원으로부터 받은 도움 및 한계점

좌담회 참석자들 중 창업 초기에 정부로부터 창업지원 수혜를 받은 이들의 대다수는 초기 정부지원이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본인 소유 자본금만으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초기 사업 세팅이 매우 힘들었거나, 혹은 아예 창업의 꿈을 접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청년 창업주들의 의견은 창업 초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자본시장 불완전성으로 인한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행 정부의 창업지원 방식에 대한 창업기업주들의 쓴 소리도 많이 표출되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시행기관의 창업정책 담당자가 갖는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가 민간기업과는 전혀 다르고, 이로 인한 갈등요인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즉 창업지원정책의 공급자 관점에서는 해당 정책 및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책 수요자의 이익과 괴리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원래 공시되었던 개별 창업지원사업의 내용이 사업 중도에 변경되는 사례, 순환보직제로 인해 각 지원사업의 담당자가 중도에 자주 바뀌는 데 따른 불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편 창업 관련 정부 지원

금이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자 및 창업 브로커의 존재로 인해 오남용되는데 대한 지적이 있었고, 기업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워크숍 등 정부 및 시행기관 주최 행사에 네트워킹을 명분으로 참석을 강요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표출되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창업지원이 일정 수준 이상 지나치게 지속되다 보면 지원받는 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창업 초기부터 정부의 지원사업에 의존하여 기업 운영을 영위하는 경우, 자생력 부족으로 폐업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죽음의 계곡 통과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창업 3년차 이후 소위 죽음의 계곡을 무난히 통과하여 기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식으로서, 지금처럼 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를 위해 해외 특정 국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지나치게 편중되기 보다, 해외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현재에도 관련 지원이 있기는 하나 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달하므로, 지금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효율화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 외에는 제품 홍보 관련 컨설팅, 클라우드 펀딩 및 유통채널 관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제공, 연기금을 통한 소기업 자본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표출되었다. 더불어 창업 3년차 이상에 도달했으면 더 이상 정부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스스로 창업 아이디어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창업주도 있었다.

라. 최적 창업 시점

가급적 대학 졸업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청년층 창업이 활

성화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이미 창업한 창업주 관점에서 최적 창업 시점이 언제라고 보는지 의견 제시를 요청한 결과, 본인의 기업을 창업하기 전 일정 기간 이상의 직장생활 등 사회경험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굳이 창업 전 사회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전 일정 기간 이상 사회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창업자들의 경우,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일정 기간 이상 한 경우 관련 노하우 습득 및 창업 후 활용 가능한 인적 인프라 구축 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표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창업인턴제사업에 참여하여 타 스타트업에서 1년 동안 일한 것이 투자자금 유치 및 기업 운영 노하우 습득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담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창업 업종과 연관이 없는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한 것만으로도 창업 후 영업활동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역시 피력되기도 하였다. 한편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쌓지 않고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뛰어드는 경우, 철저한 검토 없이 기존에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아이템을 반복하는 등의 행태로 인해 정부의 창업 지원금이 낭비되는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반면 굳이 창업 전에 사회경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들의 경우, 어차피 새롭게 창업한 기업은 기존의 일반 대기업과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기존 본인이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유형의 창업은 바람직하지 않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면 경력에 관계없이 최대한 일찍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연령이나 경력이 높을수록 창업 후 실패 확률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성공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마. 기타 주요 사안 논의

두 차례의 FGI 개최 이전 미리 작성된 설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던

질문에 더해, 좌담회 과정에서 표출된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는 데 있어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정된 자원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창업지원 관련 브로커의 활동이 만연한 데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브로커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는 거의 없고 적발 시 처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정부의 창업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일단 발생한 후에 사후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익명제보 포상금제를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되었다.

반면 오히려 발상을 전환하여, 창업지원 브로커의 활동을 양성화하고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을 시켜주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위에 요약 제시된 논의 결과에도 일부 소개되어 있으나, 창업주들은 정부의 창업인턴제 사업에 대해 여타 정부의 인턴지원사업과는 달리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재학 중에 창업인턴 경력을 쌓았더라면 본인 창업에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을 염두에 둔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견해, 꼭 본인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경험을 쌓는 기회로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창업인턴제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으로서 창업인턴 수료 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제2절 GOMS 자료를 활용한 청년층 창업실태 분석

이 절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에서 나타난 청년층 창업

의 일반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청년층 창업비용 규모와 조달 방식

청년층 창업비용의 규모와 비용조달 방식은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층 창업비용 규모는 2011년 약 1.3억 원에 달하였으나, 이후로는 창업비용이 점점 줄어들어 2016년에 이르러서는 약 7천만 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창업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은 GOMS에서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6년 현재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본인 또는 가족, 친지’로부터 비용을 조달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규모가 그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한 비용조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창업비용 규모와 비용조달 방식

(단위: 만 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총비용	8596.0 (100.0)	8786.2 (100.0)	7743.2 (100.0)	6910.9 (100.0)	6991.2 (100.0)
(1) 본인 또는 가족, 친지	5682.7 (66.1)	6923.1 (78.8)	5650.6 (73.0)	5425.4 (78.5)	4650.6 (66.5)
(2) 동업자	788.9 (9.2)	316.1 (3.6)	227.5 (2.9)	235.4 (3.4)	257.3 (3.7)
(3)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	1770.4 (20.6)	1366.0 (15.5)	1433.8 (18.5)	1102.0 (15.9)	1463.4 (20.9)
(4) 동업자 또는 친지 이외의 타인에게 빌림	114.5 (1.3)	103.8 (1.2)	305.8 (3.9)	58.6 (0.8)	40.3 (0.6)
(5) 대금업자(사채)	4.1 (0.05)	0.0 (0.0)	3.2 (0.04)	7.1 (0.1)	4.1 (0.1)
(6) 정부의 보조 및 지원	197.3 (2.3)	201.5 (2.3)	112.1 (1.4)	85.7 (1.2)	471.0 (6.7)
(7) 기타	3.1 (0.04)	0.9 (0.01)	0.0 (0.0)	3.6 (0.1)	104.5 (1.5)

2. 청년층 창업 애로요인

창업과정에서 겪은 애로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자금 확보가 쉽다는 응답이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보다 낮아 약간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창업 소요비용 대부분이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이며, 가족의 소득수준과 창업이 긴밀한 정(+)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조사결과이다. 다른 한편,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7,000만 원에 지나지 않아 청년층 창업이 주로 적은 비용의 창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암시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창업의 애로요인으로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보다 낮아 전체적으로 약간 쉽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청년층의 창업이 기술창업보다는 일반적인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적당한 인력 확보에 관해서는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보다 낮아 약간 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초기상태여서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표 4-2〉 창업 애로요인 : 비용조달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1. 매우 어려움	68 (13.9)	57 (15.3)	30 (8.5)	62 (17.7)	54 (16.5)
2. 어려움	151 (30.8)	112 (30.0)	148 (42.0)	133 (37.9)	100 (30.5)
3. 보통	186 (38.0)	124 (33.2)	118 (33.5)	106 (30.2)	122 (37.2)
4. 쉬움	65 (13.3)	60 (16.1)	46 (13.1)	40 (11.4)	44 (13.4)
5. 매우 쉬움	20 (4.1)	20 (5.4)	10 (2.8)	10 (2.8)	8 (2.4)
합 계	490 (100.0)	373 (100.0)	352 (100.0)	351 (100.0)	328 (100.0)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창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체 대부분이 5인 이하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짐작되며, 향후 업체가 성장하게 되면 인력 확보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나, 응답 시점에서

〈표 4-3〉 창업 애로요인 : 기술 확보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1. 매우 어려움	24 (4.9)	19 (5.1)	13 (3.7)	12 (3.4)	14 (4.3)
2. 어려움	75 (15.3)	66 (17.7)	59 (16.8)	72 (20.5)	73 (22.3)
3. 보통	197 (40.2)	146 (39.1)	155 (44.0)	154 (43.9)	144 (43.9)
4. 쉬움	155 (31.6)	113 (30.3)	105 (29.8)	90 (25.6)	81 (24.7)
5. 매우 쉬움	39 (8.0)	29 (7.8)	20 (5.7)	23 (6.6)	16 (4.9)
합 계	490 (100.0)	373 (100.0)	352 (100.0)	351 (100.0)	328 (100.0)

〈표 4-4〉 창업 애로요인 : 인력 확보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1. 매우 어려움	26 (5.3)	25 (6.7)	18 (5.1)	43 (12.3)	24 (7.3)
2. 어려움	101 (20.6)	81 (21.7)	86 (24.4)	72 (20.5)	69 (21.0)
3. 보통	201 (41.0)	138 (37.0)	150 (42.6)	143 (40.7)	147 (44.8)
4. 쉬움	131 (26.7)	94 (25.2)	82 (23.3)	68 (19.4)	63 (19.2)
5. 매우 쉬움	31 (6.3)	35 (9.4)	16 (4.5)	25 (7.1)	25 (7.6)
합 계	490 (100.0)	373 (100.0)	352 (100.0)	351 (100.0)	328 (100.0)

는 응답자들이 창업 초기여서 여타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2011년 이래 6년간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행정절차가 창업의 큰 애로요인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타 보조금 사업이나 정부 지원사업에서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창업 자체에서 행정절차는 그리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기서의 조사결과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창업까지 조사한 결과이므로, 정부지원 창업에서 행정절차의 애로요인 정도는 정부지원 사업을 받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업종 선정에서도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아 업종 선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전문대학 졸업자가 조금 더 업종 선정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업종 선정이 용이하다고 응답한 창업가가 어려움을 호소한 창업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창업 단계에서 기술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보다는 판매나 음식점 창업 등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4-5〉 창업 애로요인 : 행정절차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1. 매우 어려움	26 (5.3)	22 (5.9)	17 (4.8)	17 (4.8)	24 (7.3)
2. 어려움	70 (14.3)	60 (16.1)	69 (19.6)	64 (18.2)	75 (22.9)
3. 보통	222 (45.3)	171 (45.8)	163 (46.3)	164 (46.7)	131 (39.9)
4. 쉬움	144 (29.4)	91 (24.4)	85 (24.1)	81 (23.1)	73 (22.3)
5. 매우 쉬움	28 (5.7)	29 (7.8)	18 (5.1)	25 (7.1)	25 (7.6)
합계	490 (100.0)	373 (100.0)	352 (100.0)	351 (100.0)	328 (100.0)

사업장 위치 선정에서의 애로정도에 대해서는 쉽다는 응답 비율이 보통 수준이라는 비율보다 낮아 응답자들이 사업장 위치 선정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창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경

〈표 4-6〉 창업 애로요인 : 업종 선정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1. 매우 어려움	14 (2.9)	17 (4.6)	11 (3.1)	14 (4.0)	9 (2.7)
2. 어려움	38 (7.8)	34 (9.1)	46 (13.1)	43 (12.3)	47 (14.3)
3. 보통	187 (38.2)	145 (38.9)	138 (39.2)	149 (42.5)	125 (38.1)
4. 쉬움	201 (41.0)	130 (34.9)	122 (34.7)	102 (29.1)	108 (32.9)
5. 매우 쉬움	50 (10.2)	47 (12.6)	35 (9.9)	43 (12.3)	39 (11.9)
합 계	490 (100.0)	373 (100.0)	352 (100.0)	351 (100.0)	328 (100.0)

〈표 4-7〉 창업 애로요인 : 사업장 위치 선정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1. 매우 어려움	32 (6.5)	30 (8.0)	24 (6.8)	36 (10.3)	29 (8.8)
2. 어려움	95 (19.4)	83 (22.3)	88 (25.0)	92 (26.2)	82 (25.0)
3. 보통	186 (38.0)	128 (34.3)	126 (35.8)	119 (33.9)	117 (35.7)
4. 쉬움	150 (30.6)	107 (28.7)	95 (27.0)	70 (19.9)	73 (22.3)
5. 매우 쉬움	27 (5.5)	25 (6.7)	19 (5.4)	34 (9.7)	27 (8.2)
합 계	490 (100.0)	373 (100.0)	352 (100.0)	351 (100.0)	328 (100.0)

〈표 4-8〉 창업 애로요인 : 창업관련 정보의 수집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1. 매우 어려움	24 (4.9)	23 (6.2)	21 (6.0)	16 (4.6)	24 (7.3)
2. 어려움	78 (15.9)	70 (18.8)	85 (24.1)	85 (24.2)	86 (26.2)
3. 보통	221 (45.1)	174 (46.6)	152 (43.2)	159 (45.3)	120 (36.6)
4. 쉬움	146 (29.8)	91 (24.4)	82 (23.3)	73 (20.8)	57 (17.4)
5. 매우 쉬움	21 (4.3)	15 (4.0)	12 (3.4)	18 (5.1)	41 (12.5)
합 계	490 (100.0)	373 (100.0)	352 (100.0)	351 (100.0)	328 (100.0)

우에는 사업장 위치가 창업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위 결과는 청년창업이 기술창업보다는 서비스업 창업의 비중이 높아서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된다.

창업정보 수집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창업 관련해서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업정보는 많지 않으며, 특히 맞춤형으로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이와 같은 응답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창업 도움요인

전공지식이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자 비율보다 약간 높아 전체적으로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공지식이 창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대략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지식이 창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창업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창업의 경우, 대학에서 학습한 전공의 도움 정도

〈표 4-9〉 창업 도움요인 : 전공지식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전혀 도움되지 않음	80 (15.3)	48 (11.4)	42 (10.6)	63 (16.7)	62 (17.0)
도움되지 않음	77 (14.8)	58 (13.8)	53 (13.4)	52 (13.8)	53 (14.5)
보통	89 (17.1)	49 (11.7)	67 (17.0)	60 (15.9)	69 (18.9)
도움됨	141 (27.0)	100 (23.8)	96 (24.3)	94 (24.9)	69 (18.9)
매우 도움됨	135 (25.9)	151 (36.0)	128 (32.4)	106 (28.1)	104 (28.5)
해당사항(경험) 없음	0 (0.0)	14 (3.3)	9 (2.3)	2 (0.5)	8 (2.19)
합 계	522 (100.0)	420 (100.0)	395 (100.0)	377 (100.0)	365 (100.0)

가 클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는 업종별로 별도로 분석하지 않아 어떤 분야의 전공지식이 창업에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10〉에서는 이전 일자리 경험이 창업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보통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추이도 대략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호회 활동경험은 창업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아리·동호회 활동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움 + 매우 도움)은 대략 25%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움 안됨 + 전혀 도움 안됨)도 대략 비슷한 수치를 보이거나,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동호회·동아리 활동경험은 학창시절에 창업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여겨지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만 본다면 이러한 활동이 기대에 미치는 정도로까지 실제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

단된다. 대학당국의 지원이나 정부지원을 통해 창업 동아리·동호회의 활동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표 4-10〉 창업 도움요인 : 직장경험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전혀 도움되지 않음	47 (9.0)	28 (6.7)	21 (5.3)	24 (6.4)	32 (8.8)
도움되지 않음	68 (13.0)	49 (11.7)	37 (9.4)	42 (11.1)	43 (11.8)
보통	95 (18.2)	92 (21.9)	73 (18.5)	67 (17.8)	82 (22.5)
도움됨	152 (29.1)	95 (22.6)	121 (30.6)	106 (28.1)	74 (20.3)
매우 도움됨	116 (22.2)	101 (24.1)	108 (27.3)	98 (26.0)	85 (23.3)
해당사항(경험) 없음	44 (8.4)	55 (13.1)	35 (8.9)	40 (10.6)	49 (13.4)
합 계	522 (100.0)	420 (100.0)	395 (100.0)	377 (100.0)	365 (100.0)

〈표 4-11〉 창업 도움요인 : 동아리·동호회 활동경험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전혀 도움되지 않음	67 (12.8)	50 (11.9)	39 (9.9)	53 (14.1)	47 (12.9)
도움되지 않음	125 (24.0)	63 (15.0)	66 (16.7)	68 (18.0)	58 (15.9)
보통	127 (24.3)	93 (22.1)	124 (31.4)	92 (24.4)	113 (31.0)
도움됨	71 (13.6)	65 (15.5)	77 (19.5)	57 (15.1)	51 (14.0)
매우 도움됨	40 (7.7)	49 (11.7)	41 (10.4)	39 (10.3)	35 (9.6)
해당사항(경험) 없음	92 (17.6)	100 (23.8)	48 (12.2)	68 (18.0)	61 (16.7)
합 계	522 (100.0)	420 (100.0)	395 (100.0)	377 (100.0)	365 (100.0)

<표 4-12>의 응답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청년창업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난 5년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응답 사례가 매년 20% 내외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폭이 지나치게 좁거나, 사전적으로 청년층이 이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 인식이 강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창업 컨설팅 역시 창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에 의하면 민간창업 컨설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며, 이러한 추세는 지난 5년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창업 컨설팅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5~33%로 나타나 민간창업 컨설팅의 효과성은 차치하고라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표 4-12> 창업 도움요인 :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13 (21.7)	78 (18.6)	75 (19.0)	85 (22.6)	76 (20.8)
도움 되지 않음	140 (26.8)	80 (19.1)	92 (23.3)	91 (24.1)	68 (18.6)
보통	96 (18.4)	75 (17.9)	95 (24.1)	74 (19.6)	91 (24.9)
도움 됨	29 (5.6)	40 (9.5)	47 (11.9)	38 (10.1)	34 (9.3)
매우 도움 됨	28 (5.4)	23 (5.5)	32 (8.1)	20 (5.3)	23 (6.3)
해당사항(경험) 없음	116 (22.2)	124 (29.5)	54 (13.7)	69 (18.3)	73 (20.0)
합 계	522 (100.0)	420 (100.0)	395 (100.0)	377 (100.0)	365 (100.0)

〈표 4-13〉 창업 도움요인 : 민간창업 컨설팅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전혀 도움되지 않음	119 (22.8)	85 (20.2)	75 (19.0)	95 (25.2)	72 (19.7)
도움되지 않음	140 (26.8)	88 (21.0)	100 (25.3)	100 (26.5)	69 (18.9)
보통	93 (17.8)	62 (14.8)	96 (24.3)	69 (18.3)	97 (26.6)
도움됨	20 (3.8)	35 (8.3)	38 (9.6)	25 (6.6)	37 (10.1)
매우 도움됨	18 (3.5)	12 (2.9)	26 (6.6)	14 (3.7)	9 (2.5)
해당사항(경험) 없음	132 (25.3)	138 (32.9)	60 (15.2)	74 (19.6)	81 (22.2)
합 계	522 (100.0)	420 (100.0)	395 (100.0)	377 (100.0)	365 (100.0)

〈표 4-14〉 창업 도움요인 : 창업보육과정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전혀 도움되지 않음	117 (22.4)	90 (21.4)	79 (20.0)	96 (25.5)	69 (18.9)
도움되지 않음	132 (25.3)	73 (17.4)	103 (26.1)	100 (26.5)	65 (17.8)
보통	93 (17.8)	70 (16.7)	90 (22.8)	56 (14.9)	99 (27.1)
도움됨	38 (7.3)	42 (10.0)	39 (9.9)	43 (11.4)	32 (8.8)
매우 도움됨	19 (3.6)	16 (3.8)	23 (5.8)	10 (2.7)	14 (3.8)
해당사항(경험) 없음	123 (23.6)	129 (30.7)	61 (15.4)	72 (19.1)	86 (23.6)
합 계	522 (100.0)	420 (100.0)	395 (100.0)	377 (100.0)	365 (100.0)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민간창업 컨설팅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창업생태

계에 적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창업보육과정이 창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창업보육과정에 대해 ‘해당 사항(경험)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2016년 기준으로 23.6%나 되어, 대학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보육과정이 충분치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3절 소 결

본 장에서 제시된, 청년 창업자 대상 두 차례의 FGI로부터 도출된 핵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초기 정부의 창업지원은 기업가들의 창업 아이디어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는 자본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의 창업지원은 많은 부분에 개선이 필요함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기관이 지향하는 목적과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조화시키는 데 갈등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정부의 창업지원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일정 기간 이후까지 정부지원을 지속할 경우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할 때, 기존의 해외 전시회 개최 등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외 유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령이나 경력 등의 관점에서 언제가 창업의 최적 시점인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무조건 대학 졸업 직후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게 모든 이들에게 최적이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본인

스스로 최적 창업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창업하면서 초기 자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창업지원 관련 브로커의 불법적인 활동이 만연한 데 따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불법적 활동에 치중하는 창업 브로커들은 도태시키되,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재 창업지원 브로커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중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건전한 시장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행 정부의 창업인턴제 사업에 대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활용도 제고 및 긍정적 영향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GOMS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청년 창업실태는 전반적으로 FGI 분석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GOMS 조사에서도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가 미미하고, 민간 창업컨설팅 역시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FGI 결과 이외에도 GOMS의 분석 결과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청년 창업이 기술창업보다는 일반창업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애로요인의 분석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청년 창업의 현재 모습이 그리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창업에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현재 청년 창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요소는 직장경험이 유일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동호회 활동, 민간창업 컨설팅, 창업보육과정 등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년 창업생태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 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전반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만을 가지고 정부의 청년창업정책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국내외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폭넓게 검토한 후 건강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창업지원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제1절 미국의 사례

1. 창업지원정책 개요

미국의 창업정책은 오바마 정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오바마 정부는 세 번의 ‘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하였는데, 2009년 발표된 첫 번째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2011년에 발표된 두 번째 전략에서는 ‘경제 성장과 번영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시장 중심의 혁신(innovation)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라는 창업지원정책을 발표했다. 2015년에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세 번째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그간의 혁신정책을 총망라하여 집대성하였으며, 여기서는 창업과 기업혁신 활동 영역에서 장기적인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정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혁신창업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2011년에 발표된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에 잘 정리되어 있다(The White House, 2011). 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액셀러레이터 활성화를 통

한 창업지원에 중점을 두어 경제 성장과 혁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은 창업과 관련한 각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강조하여 왔으며, 혁신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가와 대학, 연방정부 등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혁신적 창업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업가 정신 교육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연방정부 차원의 R&D 강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미국은 창업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도 시행 중이다. 일례로 미국 중소기업청에서는 ‘스케일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cale-up America Initiative)’를 2014년에 발표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2. 창업 플랫폼

미국 창업 플랫폼의 특징은 주로 민간이 중심이 된 창업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간 차원의 플랫폼 중에서도 IT 분야 대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혁신 창업지원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Google, GE 등 글로벌 초대기업도 기업형 액셀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유망한 창업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액셀러레이터는 Y-Combinator(이하 YC)이다. 2005년에 설립된 YC는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 2015년 현재 560여 개 사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창업 후 생존율 90%와 평균 기업가치 4,500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최세경·곽규태, 2017).

2018년 현재에는 1,900여 개의 기업들이 YC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YC의 지원영역은 다양하다. B2B 분야부터 드론 관련 분야, 교육관련 분야 등 총 25개 영역에 걸쳐 있다.

YC가 지원대상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우선 1년에 두 번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소재하는 YC로 초청하여 YC 관계자들과 집중적인 공동 작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확정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데모 데이(Demo-day)에 비공개로 초청된 투자자들에게 시연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 150만 달러의 시드머니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도 화장품 업체인 미미박스, 메시징 솔루션 업체인 센드버드 등이 YC의 지원을 받고 있다.

YC는 비단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뿐 아니라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10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http://www.ycombinator.com/>).

YC와 같이 순수 민간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 중소기업청에서 추진 중인 청정에너지 분야 ‘CleanTech Open’, ‘Clean TECH San Diego’, ‘Clean Energy Trust’, ‘Nevada Institute for Renewable Energy Commercialization’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미국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하버드 대학 마일즈 메이스(Myles Mace) 교수에 의해 최초로 학교 내에 창업과정을 도입한 이래 이후 MIT에서 창업과목을 개설하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을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교육이 보편화된 시기는 1970년대이며, 이 당시부터 학부 및 석사 수준에서 창업 관련 교육이 우후죽순처럼 태동하게 된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대학에서 창업교육은 사업계획 개발부터 마케팅 활동까지 창업 전 분야를 망라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 사례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한편 미국 대학에서는 창업을 통한 단기적 수익창출보다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표 5-1〉 미국의 주요 대학별 창업교육과정의 특성

대학명	주요 특성	주요 교과목
Babson Colle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단계별 모듈에 의한 현장 중심 사례 교육 - 사례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개발 - 강의·프로그램 지원 	벤처경영, 성장관리, 사회적 기업가, 가족기업경영, 세금계획, 마케팅, 벤처캐피탈 연구, 현장연구
Stanford Univer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A와 공과대학에 개설 - 공과대학이나 MBA 과목들도 공동 수강가능 - 팀제 운영 	기술기반기업의 전략, 글로벌 마케팅, 벤처기업재무관리, 사회적 기업가, 기술벤처창업, 창업조직과 인사관리, 성장관리 첨단기술 기술창업, 창업과 지속성장
Watson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을 대학원과 연계하여 운영 - 고급 연구과제 시스템 도입으로 개별 연구 가능 	중소기업 시스템, 경제경영, 개별 연구, 혁신변화와 기업이 정신, 창업기업의 법률문제, 기술전략, 기업가 벤처의 실행과 디자인, 시스템 구성과 개발, 문제해결능력개발, 기업가적 마케팅
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A 위주 프로그램 - 경영과 혁신적 기술 창업을 중시 - 다수의 창업 관련 과목 운영 	신생기업론, 신제품 개발과 재무관리, 벤처마케팅, 기술창업, 첨단기술 기업론, 창업과 운영, 비즈니스 플랜 작성과 실제, 제품디자인 개발, 창업실험실(Entrepreneurship Lab)
Harvard Univer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창업과정은 주로 MBA를 대상으로 실시 	벤처재무, 벤처경영, 벤처마케팅, 기업이 정신과 창조성,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국제벤처재무, 가족기업운영, 제품개발관리, 성장관리, 현장연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A 위주 프로그램 9개 중 창업이 그중 하나로 운영 - 다양한 창업 선택과목 운영 	기업가 정신 기초, 기회확인(opportunity Identification), 기업이 정신과 뉴벤처, 기술이전경영, 글로벌경영과 마케팅, 중소기업 재무관리, 벤처창업 변화와 리더십

자료 : 호서대학교(2010), 「창업선도대학 사업계획서」.

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4).

미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실업예방 및 청소년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안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이 청소년 교육의 하나의 분야로 자리

〈표 5-2〉 미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주요 창업·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기관명	주요 특성
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 Bizcamp • 사업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강의, 현장 실습, 초청강연, 경진대회를 수행하는 2주 프로그램으로, 15~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Mini-MBA의 형태를 추구 - Start Up Summer •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이후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및 코치를 매칭
Junior Achievement	- JA Be Entrepreneurial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고등학교 기간에 벤처창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장려하며, 역량 배양을 위한 강의 및 현장체험 제공 - JA Titan • 웹 기반의 가상기업을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제품 가격, 회사 마케팅, 연구개발, 기업운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 - 이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주제별로 제공하는 20여개 프로그램 제공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The Center for Young Entrepreneurs at Haas(YEAH) Program • 중학생: 팀워크, 리더십, 시간관리, 프레젠테이션, 자긍심, 문제해결능력 등을 교육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 • 고등학생: 강의, 멘토링, 코칭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스킬 및 인턴십을 제공하는 1년 프로그램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Exploring Entrepreneurship • 기업가 정신, 재무, 마케팅, 기업윤리, 사업계획,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수업, 외부활동, 기업가 정신 초청강연 등을 수행하며, 이수 학점 인정

자료: 『미국대학생 창업 인프라 심층 조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2014), p. 27에서 재인용.

잡게 되었다. 30개 이상의 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는 학교에서 직업 및 창업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2011년부터 미국 과학재단(NSF)이 민간과의 협력으로 도입한 'I-Corps'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NSF가 지원하여 공개된 연구결과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기업이 정신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이다.

4. 창업지원 파트너십

미국에서 창업지원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창업지원 파트너십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비영리 재단인 'Startup America Partnership(SUAP)'을 들 수 있는데, 이 조직은 기업 경영자와 벤처투자자, 엔젤투자자, 기업, 대학, 재단 등의 협력관계하에 조직되어, 전국의 창업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재단은 미국 정부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에 있다. 이 재단에 협력하고 있는 주요 미국 기업들은 자금지원뿐 아니라 멘토링 등 건전한 창업생태계 확립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UAP는 미국 모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① 교육(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 ② 사업화(원천연구의 시장 상용화 지원), ③ 창업지원(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전파) 등 창업기업 보육에 초점을 두어 스타트업을 위한 장기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미국 기반의 모든 창업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Idea, Startup, Rampup, Speedup의 네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각 단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최세경·박규태, 2017).

제2절 이스라엘의 사례

1. 창업지원정책 개요

이스라엘은 정부주도로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경제부 산하의 수석과학관실(OCS: The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이 이스라엘 창업정책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수석과학관실은 정부 R&D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석과학관실 주도의 창업정책은 한때 정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정부는 정책의 민영화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현재는 민간 부문과의 돈독한 협력관계 속에서 기술 창업과 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주도의 창업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관료적 특성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과 기술 개발 지원 정책 추진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이를 통해 민간 수요를 반영함과 아울러 공공 부문에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창업과 기술개발 지원에 있어서 민간의 영역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나,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정부 주도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석과학관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창업정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해외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마켓 지향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을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민족의 강한 연대의식으로 인해 글로벌마켓 지향의 해외 네트워크 강화 전략이 창업 지원 전략으로서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창업정책의 주요 내용¹⁷⁾

이스라엘의 창업정책은 예비단계 프로그램과 경쟁 전 단계 및 장기 R&D 단계로 나뉜다. 예비단계 프로그램으로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R&D 펀드, 트누파(Tnufa), 헤즈넥(Heznek), 노파르(Nofar), 생명과학 펀드 등이 있다. 먼저 R&D 펀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펀드로서 이스라엘 자국에서 행해지는 제품 개발과 제품 개선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2014년 현재 약 4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약 600개 기업 1,000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다.

트누파(Tnufa)는 정부의 종합지원제도로서 창업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트누파는 창업 예비 단계에서 기업과 개인 발명가에게 주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혁신 장려와 기업이 정신 고취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특히 이 제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창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과 개인에게 일종의 ‘종자돈’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용처는 주로 창업에 필요한 특허등록, 제품 개발, 마케팅 등이다. 지원금의 최대 규모는 6만 달러 정도이며, 지원이 승인되면 총 지원금의 약 85% 정도는 수석과학관실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는 창업자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주로 기술 중심 기업인데, 지원대상 선발은 평가자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원기업은 대체로 약 500여 개 정도이며, 지원 신청기업 중에서 20~30% 정도가 최종적으로 투자승인을 받는다.

트누파 프로그램과 관련해 약 120여 명 정도의 평가위원이 있다.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학문적 지식뿐 아니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석사 정도의 학력에,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다. 평가위원 역시 높은 경쟁의 공개적 선발과정을 거치며, 연간 30~40명이 선발된다. 이들 평가위원의 높은 역량은 트누파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 핵심적 요인이다.

헤즈넥(Heznek)은 벤처캐피탈과 정부의 매칭펀드 형식을 띤 지원정책

17) 이권형 외(2015),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펀드 혹은 투자회사 등 외부 투자자의 객관적 평가와 정부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외부투자자와 수석과학관실이 공동으로 매칭펀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정부 지원은 최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R&D 승인 예산의 2/3 혹은 기업 총지출의 1/2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노파르(Nofar)는 학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학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12~15개월의 장기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정부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노파르의 목적은 주로 학계에서 수행되는 기초연구를 산업 측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파르를 통해 상업화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에 대한 로열티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높은 편이다.

생명과학 펀드(Life Sciences Fund)는 바이오기술 산업에 특화된 펀드이다. 이 펀드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스라엘의 바이오기술 산업을 한층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이오기술 분야에 특정하여 정부지원을 하는 이유는 이 분야의 경우 R&D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며,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이며, 투자위험 또한 높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만 맡겨놓을 경우 충분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수석과학관실은 경쟁 입찰을 통해 Orbimed Partners Israel을 대표 파트너 겸 사업관리자로 선정하고 펀드를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는 총 2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 펀드의 경우 최소한 10년 동안을 투자하여야 하며, 이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개별 기업은 최대 5년 동안 투자받을 수 있으며, 펀드 중에서 일정 부분 이상에 대한 바이오제약 분야 투자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양한 경쟁 전 단계 및 장기 R&D 프로그램(Pre-Competitive and long-term R&D Programs)을 운용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대표적인 펀드로는 마그넷(Magnet)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그넷은 다양한 창업 연관 주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연구실에서의 실험적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상용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운

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즉 학교 연구기관, 산업계, 그리고 기술사용자 등과 상호 협업을 통한 기술의 현장화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수석과학관실이 주관하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년 동안 80만 달러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승인된 예산의 66% 한도 내에서 개별 기업 및 프로젝트에 지원 가능하다. 유관 주체들 간 상호 협업의 원칙에 따라 지원 신청 프로젝트에는 학교 연구기관 1개 이상, 기업 2개 이상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향후 수익 발생 시 로열티 지급의무는 없다.

텔레럼 포럼(Telem Forum)은 경제부 산하 수석과학관실과 과학기술부, 재무부, 국방부 등 여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럼이다. 이 포럼의 목적은 참여자 간 공동 관심사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R&D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 포럼의 재원은 포럼에 참여하는 각 부처의 고유 재원에서 충당된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내의 우수 연구기관을 선별하여 해당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Russell Berrie Nanotechnology Institute 등 다양한 전문 연구기관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우수 연구기관 선정제도 역시 장기적으로는 창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3.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¹⁸⁾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정부 창업정책의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컨설팅, 행정절차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즉 동구사회가 몰락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약 75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등 해외 거주 유대인 출신의 고급기술자와 과학자들의 국내 유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국내 이주 후 군 관련 연구기관과 방위산업체 등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이후 1993년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중동

18) 이권형 외(2015),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과의 일시적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국방비 감축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유입된 러시아 출신 유대인 중 많은 수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들이 주축이 되어 기술 기반의 창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이러한 연유로 증가하게 된 창업 인구에 대해 금융지원 이외에도 마케팅, 경영, 행정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낙후된 일부 지역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정부의 첨단기술 개발 목표 달성 등의 형태로 지원되기도 하였다.

1991년에 도입된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2002년에는 민영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민영화의 원인은 정부주도 프로그램 운영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이 도입된 1991년 24개 인큐베이터가 설립된 이래 27개까지 인큐베이터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개별 인큐베이터의 규모도 커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정부 주도의 기술 인큐베이터 투자의 비효율성이 증폭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2002년 민영화를 통해 기술 인큐베이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기술 인큐베이터의 민간 운영주체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수석과학관실에서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벤처캐피탈 및 민간 컨소시엄 모집을 위한 경쟁 입찰을 공고한다. 2단계로 수석과학관실 주관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정과정은 운영기관에 대한 역량평가에 기반한다. 3단계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기관은 기술 인큐베이터 관리를 위해 전문관리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설립된 기술 인큐베이터는 4년간의 의무 운영기간 동안 운영을 하며, 의무 운영기간 만료 1년 전에 추가적으로 4년간 계속 운영할지 여부를 정부에 알려준다. 개별 기술 인큐베이터의 최대 운영기간은 8년이다.

기술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은 ‘창업자의 프로젝트 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의 예정 입주기업 선정(최종 입주기업의 120%) → 기술 인큐베이터의 참가지원 기업 프로젝트 계획서 발표(수석과학관실 주관)

→수석과학관실 최종 대상기업 선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정부 85%, 기술 인큐베이터 15%로 이루어지며,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특별히 바이오기술에 대한 지원은 3년간 지원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3개월 단위로 제출된 계획서 이행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며, 이러한 단계별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기술 인큐베이터가 정부 주도로 수행되었을 때에는 그 목적이 이윤창출이나 수익 추구보다는 공공적인 목적으로서의 창업지원에 있었으나, 운영 주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수익창출 목적이 더욱 강화되었다. 보수기술 인큐베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는 기술 아이디어만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술 인큐베이터로부터 자금을 얻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득을 가진다. 기술 인큐베이터 입장에서는 전체 투자금의 15%만을 기술을 가진 창업자에게 투자한 후 30~50%에 달하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기술 인큐베이터에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임함에 따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창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기술 인큐베이터에 높은 인센티브를 지불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서 정부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된다.

4. 요즈마 펀드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요즈마 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대표적 창업정책이다. 요즈마 펀드는 사실 이전의 인발(Inbal) 펀드를 개선하여 재탄생한 펀드이다. 인발 펀드는 전술하였던바 198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 유대인의 국내 회귀와 관련이 있다. 러시아 유대인의 대규모 국내 회귀 이전에도 창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는 하였으나, 창업자금이 풍부하지 못하여 강한 추진력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러시아 출신 유대인이 대거 유입되어 창업에 나서게 되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판단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인발 펀드를 민관 합작으로 조성하였다. 국영 보험회사인 인발은 투자한 벤처캐피탈이 텔아비브에 소재하는 주식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공모가의 70%까지 보장하는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지원내용으로 창업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주식 가격이 실제 펀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원받은 기업은 정기보고서 작성을 지연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인발 펀드 운영상에도 관료주의적 특성으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가 하면, 유능한 벤처캐피탈은 참여가 저조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요즈마 펀드는 이러한 인발 펀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참여자의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펀드를 운영하였다. 인발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쟁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늘상 나타나기 쉬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시장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1993년 요즈마 펀드로 재탄생하였다.

요즈마 펀드는 정부 투자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과 함께 자본조달 능력이 없는 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요즈마 펀드는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가 4:6의 비율로 구성된 일종의 모태펀드라고 할 수 있다. 출범 당시 1억 달러 규모로 1호 펀드가 조성되었으나, 3년간 무려 2천만 달러 규모의 자펀드 10개가 추가적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첨단 기술기업 전용 펀드인 요즈마 벤처펀드를 직접 투자하기에 이른다. 수석과학관실에서 직접 투자를 추진한 이유는 첨단산업의 고위험성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었다.

요즈마 펀드는 정부 지원뿐 아니라 민간 참여의 활성화로 높은 투자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요즈마 펀드는 지원 규모가 1개 프로젝트당 최대 800만 달러이며, 지원 형태는 2개 벤처캐피탈과 정부가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또한 창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참여 벤처캐피탈이 정부 지분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참여 벤처

캐피탈은 5년 기간 안에 정부 투자지분을 매수할 수 있어 더욱 더 많은 민간 벤처캐피탈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즈마 펀드의 규모가 확대된 1997년에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1998년에 이르러 요즈마 펀드가 관리 운영하고 있던 14개 기업을 매각하여 민영화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요즈마 2호, 2002년에는 요즈마 3호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동시에 규모도 늘려나갔다.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요즈마 펀드는 수석과학관실이 주도가 되어 조성한 것으로 이후 여러 개로 구성된 자펀드를 운영하는 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개입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도입으로 지나친 정부 개입에 따른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투자 지분이 반을 넘지 않도록 40%로 제한하고 민간이 60%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보다는 민간에 주도권을 주어 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5. 해외 네트워크¹⁹⁾

이스라엘 벤처기업이 성공한 데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계 자본의 힘에 도움을 받은 바가 크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유대계 자본은 이스라엘 벤처 창업의 성공에 커다란 기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주요 벤처투자자 대부분이 미국의 유대계 기업들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데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유대인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유대인 네트워크 조직은 세계유대인총회(WJC), 미국유대인협회(AJC), 세계시오니스트기구(WZO), 이스라엘을 위한 국제유대인기구(JAFI), 이스라엘체험기구(IEO) 등이 대표적이는데, 이들 유대인 디아스포라(Diaspora)는 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해

19) 박천수 외(2013),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게모니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박동 외, 2009: 124).²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은 총 해외 유대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 영역은 비단 미국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전 세계 유대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해외 거주, 특히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경제 분야에서 돋보이고 있다. 유대 자본의 영향력은 미국의 농업 분야부터 제조업 분야, 서비스산업 분야 등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은행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 미국은행은 유대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은행의 상위 5대 은행 가운데 체이스 맨해튼과 J.P.모간은 유대 재벌이 직접 경영하고 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영국 최대 유대 재벌인 로스차일드 가와 제휴하여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박동 외, 2009: 134).

전 세계 금융계와 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 자본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끈끈한 네트워크 역량과 모국 이스라엘 경제의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유대 민족의 민족공동체적 의식과 모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은 이스라엘 벤처 창업 분야의 성공에도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중국의 사례

1. 창업지원정책 개요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뉴노멀(신창타이) 시대’를 맞이하여 전반적으로

20) 디아스포라는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이 강제이주, 망명, 난민 등 다양한 이유로 원래의 모국에서 강제 추방 또는 자발적으로 이주한 이후 전 세계에 분산되어 거주하면서도 같은 문화를 유지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모국과 거주국 사이의 국경을 초월하는 각종 활동에 종사하는 소수 공동체”를 가리킨다(박동 외, 2009: 20).

고속성장의 양적인 경제성장보다는 질적인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011년 9.5%에서 2016년 6.7%로 하락함에 따라 중국은 예전의 발전형 국가에서 혁신지향 국가로 내부구조를 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 혁신의 일환으로 창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창업과 혁신에 대해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저임금 기반 성장방식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성장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성장방식으로는 ‘저부가가치성’이라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혁신에 기초한 고부가가치화는 지속성장의 필요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관주도 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 고속성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 국유기업 등이 주도한 반면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저발달되어 있어 국가와 민간 부문 간의 불균형 현상과 독과점적 폐해가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구조로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대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다양성과 창의성과는 상극인데, 중국의 경우 오랜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고, 서비스업 확대 및 각종 규제에 의한 경제활성화 부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을 선언하며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 국가’로의 힘찬 도약을 내걸었다. 더 이상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의 공장’에 머물지 않고, 창업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표 5-3〉 중국의 시대별 창업 열풍

	기간	특징
창업 1.0	1979~89	개혁개방의 흐름을 따라 ‘개체호’를 대표하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등장
창업 2.0	1992~97	시장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등이 소위 ‘철밥통’을 포기하고 대거 창업 열풍
창업 3.0	1997~2000	인터넷 창업 열풍에 따라 소호닷컴(1998), 시나닷컴(1998), 텐센트(1998), 알리바바(1999), 바이두(2000) 등 IT 기업들이 대거 등장
창업 4.0	2014~현재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진입하면서, 취업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창업’ 시대에 돌입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5), 『최근 중국내 창업신드림과 시사점』, p.1.

2.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중국 정부가 발표한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전국 단위 인큐베이터 1,500개 구축과 신규 일자리 300만 개 창출, 중국 내 대학생 창업 50만 명 달성 등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에는 전국 17개 도시에 창업 특성화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 실시에 대한 의견(關於建設大眾創業萬眾創新示範基地的實施意見)’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창업정책을 수립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18). 중국 정부는 2017년 양회에서 전년 도인 2016년을 혁신에 많은 성공을 거두어 산업의 생산동력을 새롭게 전환하고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한 시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문화된 창업공간 창출지원과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쌍창(雙創: 창업과 혁신) 체계를 구축할 것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사회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정책형성 시스템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정책형성 시스템의 핵심적 내용은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에서 민간으로의 권력 이양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산업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오증합일(五証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²¹⁾’ 등

기업 등록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기업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아이디어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탈규제의 혜택을 신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혁신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해외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해외 인재가 귀국하여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유학 중인 해외 유학생의 창업활동 격려 등 국적을 불문한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둘째,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 주도 국가창업투자기금 구성을 하는 등 금융지원 정책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창업 생태계 구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국가창업투자기금 400억 위안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등 금융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창업투자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금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셋째, 창업 플랫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업기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창업 관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큐베이팅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간 정보교류와 기술이전 등 활발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혁신창업공간, 창업카페 등을 전국에 보급하고 있다. 창업플랫폼 구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정책이다. 해마다 ‘대학 졸업자 취업 및 창업에 관한 통지’ 등을 발표하면서 대학생들의 창업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창업자에게 학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휴학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재정부에서는 대학생 대상인 하는 세금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1) 일조일마(一照一碼): 기존의 다섯 가지 서류를 영업집조(營業執照)로 통합하고, 통일사회신용대마(統一社會信用代碼) 하나만을 부여해 기업 운영 및 관리상 불편함을 해소.

넷째,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전국 단위의 창업대회를 개최함과 더불어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대중 창업혁신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학생 대상으로 대규모 창업대회인 ‘대학생 창신창업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에는 2,100여 개 대학교에서 약 75만 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 대회에서 실제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창업성공 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혁신 창업가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마윈과 같은 전설적 창업가를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도와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창업기업 가운데 많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의 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은 초대형 스타트업인

〈표 5-4〉 국가 과기기업 인큐베이터 13·5 발전 주요 계획

목표	주요 내용
① 새로운 중개기관 체제 구축	- 창업보육 매개체 1만 개, 국가급 인큐베이터 1,500개, 국가 등록 대중창업공간 3,000개 이상 - 30% 국가급 인큐베이터 과기창업 보육사설 구축 - 전문 인큐베이터 40% 이상, 특화 대중창업집결구 조성
② 인큐베이팅 성과 향상	- 신규 인큐베이팅 창업기업과 창업단계 20만 개, 졸업 기업은 5만 개 달성 - 인큐베이팅 기업 R&D 투자 누계 1,000억 위안 이상, 유효 지식재산권은 20만 건 이상 - 일자리 300만 개 이상 창출, 대학생 창업 50만 명, 상장기업 2,000개 이상 달성
③ 서비스 능력 제고	- 국가급 인큐베이터와 국가 등록 대중창업 공간 중 50% 이상은 창업투자기능 확보, 60%는 공공기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또는 공유
④ 개방수준 확대	- 유학생과 해외 창업자 10만 명 중국 내 창업 유치, 해외 인큐베이팅 기관 100개 유치, 해외 인큐베이팅 기관 100개 설치

자료: 科技部辦公廳關於印發《國家科技企業孵化器“十三五”發展規劃》的通知, 2017.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10월 미국의 『CB Insight』가 발표한 ‘유니콘’ 명단에는 총 217개 기업 중 중국의 기업 57개가 포함되어 중국은 세계 2위의 유니콘 기업 보유 국가로 나타났다. 세계 1위 국가인 미국과의 격차도 점차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샤오미를 포함한 4개 기업은 상위 10대 유니콘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에 중국 기업 중에서 유니콘 기업의 숫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신규 유니콘 기업의 증가 비중은 2위인 중국이 36%, 1위인 미국이 41%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과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3. 중국 창업지원정책의 특징

2000년대를 전후하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창업의 물결은 2014년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기치를 내걸면서 중앙정부의 핵심적 정책기조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굳건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중국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창업에 대한 기대와 투자기조는 일관되고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양적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질적 중심으로의 경제발전 전략 없이는 중국 경제의 발전이 질곡상태에 다다를 것이라는 판단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질적 성장의 해법을 창업확산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둘째, 정책추진에 있어서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기술혁신 정책의 빈번한 실패는 비단 중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시장경제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점을 교훈삼아 정책추진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친화적 정책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보다는 민간이 시장친화적 판단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점을 중국 정부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업에 필요한 인적자본 확보를 위해 해외 과학자 유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적인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교육도 확산되고 있으나, 국외에서 유학한 재외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창업전선에 서게 함으로써 기술 창업의 질적 향상으로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창업생태계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정부와 민간,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소 결

앞서 살펴본 3개국의 사례는 창업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각국의 정책 환경과 제도적 기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3개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정책의 관료화와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의 협력관계와 파트너십을 중시했던 미국의 사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과 중국의 사례에서 보면 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역할이 비대하였으나, 비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비효율적인 정책결과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후에는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오히려 민간 중심으로 정책 추진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의 중요성이다. 3개국에서 공히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이 창업정책의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은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가급

적 조기에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조기교육의 확산으로 더욱 더 많은 청소년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교육이 기술과 결합하게 될 경우 광범위한 혁신기술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창업 아이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운용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가자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확하게 기술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자의 관리체계가 창업지원정책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YC의 활동에서 살펴보았듯이, 액셀러레이터는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단지 단기적인 수익에 그치지 않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존재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제 6 장

결 론

제1절 평가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수행된 정량 및 정성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개별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유형을 활용하여, 정부사업 참여 관련 유형 및 기타 유형 간 고용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정량평가를 수행하였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의 조사대상인 벤처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을 의미하는 만큼, 현재 정부가 청년층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에서 정부지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자료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로부터 각 기업의 정책지원 수혜 여부를 판정하는 데 참조한 변수는 조사 대상기업의 벤처확인 유형이다. 벤처확인의 네 가지 유형은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으로 나뉜다. 이때 기술평가대출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정책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은 정부의 정책지원과 직

접 연관되지 않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제3장의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연령이 10년 이내인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2006년 6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창업 초기에 관련 제도 수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던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정부 정책지원이 청년층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미치는 일자리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주의 창업 당시 연령대 관련 문항에 대한 답변 내역을 활용하였다. 이때 창업주 연령대가 30대 이하인 경우를 청년층 창업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창업 10년차 이하인 모든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확인유형과 고용성과(총 종사자 수 및 총 정규직 근로자 수)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창업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벤처확인유형인 기술평가대출 혹은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벤처기업의 최근 고용성고가 타 유형의 벤처기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벤처기업 선정 관련 정책 지원이 수혜기업의 고용성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창업 초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의도하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 중 최소 하나는 구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청년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수혜대상으로 간주하는 30대 이하 연령층일 때 창업주가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주가 60대 이상일 때 창업한 경우 대비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일자리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지원정책을 펴나갈 때, 지식기반형 혹은 기술형 창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30대 이하 청년층의 창업 유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창업 당시 창업주가 몇 년간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상태였는지에 대한 변수의 추정계수는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단 창업주의 창업 당시 연령대, 즉 창업 이전까지 쌓아 온 사회경험의 대리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해당 분야의 직접적인 경험은 향후 기업의 고용성과와 중

요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창업 10년차 이하 모든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확인유형이 재무성과(매출액 및 영업이익)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벤처확인유형이 최근 고용성과와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무성과와도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성과를 고용 측면에서 보든 재무지표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계없이, 정부의 벤처기업 대상 창업지원정책이 수혜기업의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했거나, 혹은 향후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데 실패했거나 최소한 둘 중 하나에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창업 후 연차 관련 변수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고용변화 추이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재무성과 지표가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더불어 창업 당시 창업주의 연령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와는 별다른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일 때 창업한 기업의 고용성과가 유의하게 더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창업 이전 창업주의 전반적인 사회경험 차이로 인해, 유사한 재무성과하에서도 고용 관련 결정이 차별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창업 전 현재 업종에서의 실무경험은 영업이익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고 매출액에 대해서만 일부 모형에서 약하게 유의한 음(-)의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을 창업 10년차 이하 중 창업 시점에 창업주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였던 기업들로 국한하여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년층 창업 벤처기업 중에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은 유형의 기업의 고용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더불어 창업 후 10년차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의 벤처확인유형과 재무성과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특별히 강하게 유의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4장에 제시된, 청년 창업자 대상 두 차례의 FGI로부터 도출된 정성평가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초기 정부의 창업지원은 기업가들의 창업 아이디어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는 자본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의 창업지원은 많은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기관이 지향하는 목적과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조화시키는 데 갈등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정부의 창업지원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일정 기간 이후까지 정부 지원을 지속할 경우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할 때, 기존의 해외 전시회 개최 등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외 유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령이나 경력 등의 관점에서 언제가 창업의 최적 시점인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무조건 대학 졸업 직후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게 모든 이들에게 최적일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본인 스스로 최적 창업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창업하면서 초기 자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창업지원 관련 브로커의 활동이 만연한 데 따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불법적 활동에 치중하는 창업 브로커들은 도태시키되,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재 창업지원 브로커의 역할 중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건전한 시장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행 정부의 창업인턴제 사업에 대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활용도 제고 및 긍정적 영향 극대

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 FGI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와 더불어 수행한,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한 청년 창업실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FGI 분석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창업이 기술창업보다는 일반창업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애로요인 분석결과를 면밀히 살펴 보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청년 창업의 현재 모습이 그리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현재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직장경험이 유일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동호회 활동, 민간창업 컨설팅, 창업보육과정 등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년 창업생태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국내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여 건강한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 수행된 해외 주요 3개 국가(미국, 이스라엘, 중국)의 창업지원정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국의 정책 환경과 제도적 기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공통분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정책의 관료화와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의 협력관계와 파트너십을 중시했던 미국의 사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과 중국의 사례에서는 정책 초기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비대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역할 비대화가 비효율적인 정책결과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후에는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 추진의 중심을 민간 부문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의 중요성이다. 3개국에서 공히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이 창업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가급적 이른 시기에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조기교육의 확산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기술과 결합될 경우 광범위한 혁신기술 창업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창업 아이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운용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가자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확하게 기술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자의 관리체계가 창업지원정책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Y-Combinator의 활동에서 살펴보았듯이, 액셀러레이터는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 추구에 그치지 않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존재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제2절 정책 시사점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요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식기반 창업지원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현행 정부의 창업지원이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식기반 혹은 기술 창업에 있어, 정책 수혜기업의 고용 및 재무성과 향상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주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정성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업 초기 정부의 창업지원은 기업가들의 창업 아이디어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는 자본시장 불완전성을 극

복하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 정부 지원과 직접 연관되는 벤처확인유형 기업의 고용 및 재무성과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정성분석 결과에서도 현행 정부의 창업지원은 많은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이 드러났는데, 근본적으로 정부기관이 지향하는 목적과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조화시키는 데 갈등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특정 세부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니나, 전반적으로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식기반 혹은 기술 창업 촉진에 있어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된다 할 수 있다.

2. 지식기반 창업지원에 있어 청년층 외 타 연령대에 대한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부의 창업지원 시 창업주의 특정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제시된 정량분석 결과,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등 재무적 성과와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창업 당시 연령대가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총 종사자 수 및 정규직 근로자 수 등 고용성과에 있어서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창업 당시 연령대가 높은 경우 30대 이하일 때 창업한 경우와 비교하여 긍정적인 연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는 창업 이전 창업주의 전반적인 사회경험 차이로 인해, 유사한 재무성과하에서도 고용 관련 결정이 차별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일자리 정책 관점에서 볼 때, 지식기반 창업을 사실상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전유물로 간주하고 이들 연령대에 각종 정부지원을 집중하는 현행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무적 성과가 청년층 창업기업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사회경험이 풍부한 데 바탕을 두고 고용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연령대의 창업자에게 좀 더 많은 창업지원 수혜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때 창업

주 본인의 연령대와 관계없이 창출된 일자리 종사자의 연령대가 청년층을 다수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창업을 본인의 연령대에 특별히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창업 이전까지 쌓아 온 창업주의 사회경험을 창업 당시 연령대를 통해 통제하고 나면, 동종 업종에서의 직접적인 실무경험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동종 업종에서의 사전 실무경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졸업 직후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은 창업자 본인에게도 최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본인 스스로 최적 창업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창업하면서 초기 자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창업 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정부 지원 제한

창업 후 어느 시점까지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 지속한다면 어떤 유형의 정책 지원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창업기업가의 관점에서는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소위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단계에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길 희망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정부의 창업지원이 지나치게 신생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금융회사가 지식기반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직면하게 되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및 창업 관련 정보 미비 등은 분명히 시장의 실패의 일종으로서, 정부가 개입하여 해소하는 것이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창업 후 일정 시점이 지나 소위 죽음의 계곡 단계에 이르러 아무리 창업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이를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것이 시장경제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

은 아닐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 초기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현재의 대기업 집단을 키워줬으니 현재 창업 초창기를 지난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상, 초중고 재학 시절부터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재 창업기업 지원을 둘러싼 논란의 중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초기 자본시장 제약 및 정보 미비 해소에 있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받되,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시장경제의 근간을 확실히 유지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을 테니 대신 불필요한 규제도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의 함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창업 후 일정 시점이 지나서도 해외시장 개척 등 소규모 기업이 직접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 지원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때 해외 전시회 개최 등 기존의 정부 사업방식을 답습하기보다,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정말로 기업이 원하는 해외 진출 지원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정책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정책 집행

민간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정부가 각종 사업을 통해 지원할 때, 정책 공급자의 관점보다는 최대한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창업정책 담당자는 공익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이 민간 창업기업과 상당 부분 괴리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창업정책의 공급자들이 정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 노력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민간 창업기업과 마찰을 빚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정책 공급자는 주관

및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해 확보된 예산 및 조직과 인원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창업 지원금이 창업 브로커에 의해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배분되는 데 대해서도 그다지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펼치지 않게 되고, 민간기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성 행사에 참석을 강요하는 사례 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창업기업에 공공부문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의 창업 브로커와 같은 왜곡 요인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이와 더불어 현재 창업 브로커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시장 수요가 존재한다면 이를 양성화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극대화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창업기업에 참석 필요성을 설득할 수 없다면, 단지 예산 사용 등의 목적을 위한 전시성 행사 개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행 창업지원정책이 정책 수요자 위주로 재편성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및 이로 인한 관료화와 비효율성을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과 중국의 창업지원정책 사례를 보더라도 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역할이 비대하였으나, 이로 인한 정책 비효율성이 입증된 이후에는 민간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민간 부문으로 정책 추진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점차 창업지원에서 민간의 역할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를 좀 더 가속화하여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창업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창업 아이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 운용에 있어 평가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듯 평가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이로 선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재학생 대상 창업지원사업의 목표 재검토

현재 대학 재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직후 바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준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창업지원사업들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도 지적했듯 일자리 창출 극대화 관점에서는 창업주의 지식기반 창업 시점에서 연령이 젊은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하더라도 창업주 본인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닐 것이다.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 창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중 상당수는 결국 청년층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지식기반 창업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대학 재학생 대상 정부 창업지원사업, 예를 들어 교육부의 대학창업펀드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재학생일 때 철저한 창업 준비를 시켜 졸업 후 바로 성공적인 지식기반 창업이라는 결실을 맺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이 적은 시기에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 구현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주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그나마 기업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대학 교육과정에서 주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꼭 대학 졸업 직후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판단하는 최적 시점에서 창업을 하게 될 때 정부의 각종 지원 및 규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학 재학생 대상 창업지원사업의 주요 파트로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 함양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 함양 관련 교육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 창업지원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3개국에서 공히 창업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워낙 중등교육과정이 대학 입시 위주로 매몰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두 말할 필요 없이 가급적 조기에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성공적인 지식기반형 창업 사례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및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저변 확대사업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제시된 중기부의 해당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창업성과 관련 항목이 중시되고, 기업가 정신 교육성과에 대한 항목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 현재 창업지원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향후에는 청소년 대상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 자체에 목적을 둔 사업 시행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창업인턴제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

현행 정부의 창업인턴제 사업의 긍정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창업 의욕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결국 스타트업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면, 본인 스스로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정 기간 일하면서 몸소 체험한 정보야말로 향후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본인이 반드시 창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공공부문 혹은 대기업에서의 인턴보다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쌓는 것이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창업인턴 수료자에 대한 대학 학점 부여 등을 통해 가급적 창업인턴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독려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7. 액셀러레이터 시장 활성화

앞서 미국의 창업지원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2005년 Y-Combinator의 설립 이후 민간 차원의 창업 플랫폼으로서 IT 분야 대기업이 운영을 주

도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생태계의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Y-Combinator의 사례에서 보듯,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기 수익 추구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존재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기업 등에서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창업 브로커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창업 지원금 배분에 개입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등 건전한 창업 액셀러레이터의 부재로 인한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한편으로는 이처럼 창업 브로커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시장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 창업 플랫폼의 대표 주자격인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맺음말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할 때, 그 긍정적 영향이 가급적 빨리 실현되어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2018년 12월 현재 대외 경제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은 시점에서, 기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결실이 별다르게 맺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혁신성장의 일환으로서 청년층의 조기 창업을 최대한 독려하여 단기 고용상황 개선에 일조하도록 하고자 하는 유인이 정부 입장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각종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청년층으

로 하여금 졸업 직후 바로 창업에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본 연구 결과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정부의 창업지원이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식기반 혹은 기술 창업에 있어, 정책 수혜기업의 고용 및 재무성과 향상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정부의 창업지원 시 창업주의 특정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창업자 본인의 관점에서조차 대학 졸업 직후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최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본인 스스로 최적 창업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초기 자본 제약 및 정보 미비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대학 입시 준비에 편중된 우리 교육 현실의 제약하에서 최대한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창업인턴제의 긍정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창업 의욕을 제고하며, 민간 주도 창업 플랫폼인 액셀러레이터 시장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창업주들이 지식기반형 창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질 좋은 일자리 중 상당수는 자연스럽게 청년층에게 돌아가게 되어,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혁신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창업지원은 단기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없다. 물론 경제정책 및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있어 단기적으로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장기 경제체질 강화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현재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창업지원에 대한 본 평가 연구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효율화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 2018년 7월 보도자료.
- _____ (2017),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 관계부처합동(2017),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
- 교육부(2018), 『2018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 김정홍·정윤선·박종복·안준기(2014), 『기술창업기업의 지방입지 촉진 및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남재량(2017),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_____ (2018), 『2018 관광부문 재정집행계획』.
- 박천수·박동·김수진(2013),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원근·김준일·김혜영(2014),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실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양현봉·한창용·김진수(2018),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산업연구원.
- 오계택·류성민(2015), 『창업사업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연구용역보고서.
- 이권형·손성현·장윤희(2015),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동주·이윤보·김종운(2011), 『창업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3(2), pp.73~92.
- 이우진·김종철·김가영·엄승권·박경태(2017), 『벤처창업 지원정책 현

- 황 및 성과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장균(2017),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이정현·이희연(2017), 『지식기반산업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한국 경제지리학회지』 20(2), pp.137~157.
- 조덕희(2014),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 받은 창업기업, 뛰어난 일자리 창출효과 보여』, 2017년 6월 보도자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2014), 『미국 대학생 창업 인프라 심층 조사』.
- 중소벤처기업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6년도 원자료.
- 최세경·곽규태(2017),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역할제고 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5), 『최근 중국내 창업 신드롬과 시사점』.
- KIET 산업경제(2018), 『중국의 신산업분야 창업 특징과 시사점』.
- KOTRA(2015),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 _____ (2017), 『글로벌 혁신창업과 일자리 창출 - 주요국 사례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LG 경제연구원(2016), 『중국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현주소』.

◆ 執筆陣

- 김세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 창업지원사업

- 발행연월일 | 2018년 12월 24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 발행인 | 배규식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8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280-1